

표지와 같은 도비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날짜 확인해주세요!

발간사

최근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등을 이슈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전반기부터 평화를 목표로 한·미 협조를 통해 북·미, 한국·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정상회담,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평화체제 논의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화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새로운 위협과 예상치 못한 국내외적 무력도발, 범죄, 테러 공격 등 진정한 평화적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대책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본 학회에서 연구분야로 포함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와 접근성을 지닐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정세와 함께 2018년 하반기에도 본 학회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안보,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7호에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논문들이 투고되었으며, 본 학회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통해 대테러, 안보, 경비, 드론테러와 관련한 연구들이 선정되어 발간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고자 하는 논의와 현상을 파악하여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 많은 성원과 참여,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발간을 위해 논문을 투고해주신 연구자분들과 심사위원, 편집위원들과 간사여러분, 학회 임원분들과 회원,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학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30일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장 강 옥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 회장 박준석

차 례

- 한국·미국·이스라엘의 대테러체계 및 조직연구
이치영 · 정성배 7
- 한국 주변의 무력 확충의 대비한 핵무장에 관한 연구
정주호 · 이승진 33
-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및 정립 방안
최승희 · 이재민 58
-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위협 대응방안 연구
홍태현 · 이세환 90

Contents

- A Study on the Counterterrorism System and Organization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Lee, Chi Young·Jung, Sung-Bae 7
- A study on Nuclear Arms preparing for the expansion of armed forces around Korea
Jeong, Ju Ho·Lee, Seung Jin 33
- Education and Training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 Korea
Choi, Seung Hee·Lee, Jae Min 58
- 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terror Threa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Hong, Tae Hyeon·Lee, Se Hwan 90

한국·미국·이스라엘의 대테러체계 및 조직연구

이 치 영 · 정 성 배

한국·미국·이스라엘의 대테러체계 및 조직연구

이 치 영* · 정 성 배**

[국문초록]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의 대테러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정보기관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경찰, 행정기관의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정보통합기구의 존재와, 정보통합기구의 장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테러정보와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분석, 전파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군사, 경찰, 행정기관의 정보기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테러정보활동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만이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단일 정보기관에 의하여 대테러정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응기구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테러활동의 범위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국외 테러사건의 경우 군사기관이 대응을 담당하며, 국내의 경우 재난대응, 소방, 구조, 범죄, 위험물관리, 화생방 등의 모든 기관들이 통합된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테러사건을 국외, 군사, 일반, 항공, 해양의 5가지로 분류하여 각 기관이 대테러본부를 운영하고 타 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능적인 통합을 실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을 이념적,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대상인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을 명확하게 선정하여 정보활동을 통해 테러전략과 수단, 특징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대테러대응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국경, 국내의 지역개념을 전담하는 군, 경찰의 임무분담 및 조직구성과 국가적 대테러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국가기관의 장비·훈련 등의 지원과 일부권한을 승인하여 민간지원과 예비군 또한 국가 대테러활동의 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초동조치와 테러리스트 공

*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제1저자)

** 대전대학교 외래교수 (교신저자)

격저자·체포활동이 국가의 전체적인 자원이 동원되는 시스템화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 볼 때 사실상 대테러활동은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여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테러활동의 총 결정권자로 지정하여 보다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이 어렵고,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한의 행사에 있어 제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은 대테러활동을 국토(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는데 비해 한국은 테러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각 기관별 테러대책본부를 편성하고 있어 국토안보를 위한 대테러활동이 통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테러교육, 대응절차, 지휘방법, 용어, 지원체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활동은 경찰의 지휘를 통해 지휘통제체제를 일원화하여 현재 조직적,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대테러조직의 기능적 분산 현상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대테러, 대테러조직, 국토안보부(DHS), 대테러센터, 공공안전부(ISP)

| 목 차 |
|-----|
|-----|

- | |
|---|
| I. 서론 II. 미국의 대테러 조직체계 III. 이스라엘의 대테러 조직체계 IV. 한국의 대테러 조직체계 V. 분석 및 시사점 |
|---|

I. 서 론

오늘날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경도된 테러범들에 의한 테러 사건이 일반 시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하상균, 2018), 전통적인 안보 분석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이만중, 2018).

특히 2001년 알 카에다(Al-Qaeda)에서 시작된 국지적이고 방어적이었던 테러 조직의 활동은 2013년 이라크와 레반트 지역의 이슬람국가인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 또는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의 등장 후 국제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으로 변화되었으며, 그들의 이념과 활동을 SNS,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포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파리 테러, 브뤼셀 테러와 같은 국제적인 테러를 선동,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IS의 패퇴 이후에는 점조직화된 테러단체와 조직들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전역에 산재한 잠재적 지하디스트(Jihadist)들에 대한 영향력은 확산되고 있다(인남식,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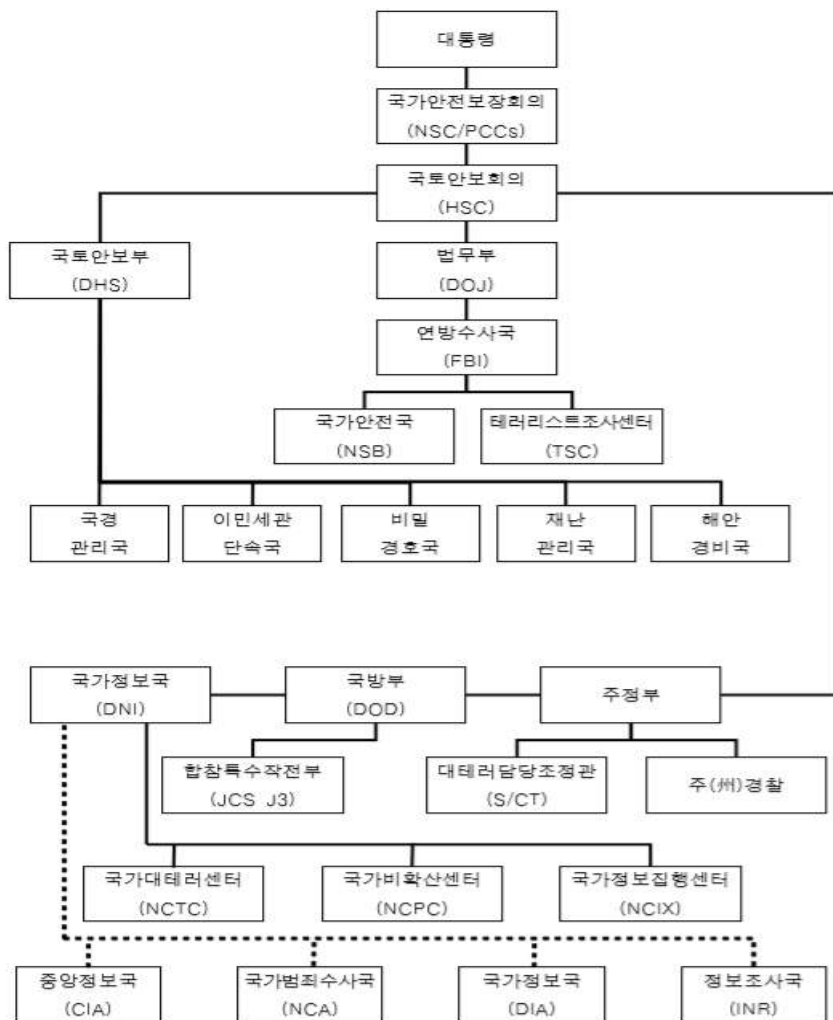
오래 전부터 헤즈볼라, 하마스 등의 국제테러단체를 지원한 북한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대남테러준비를 지시하는 등 연계한 국제테러단체의 대한민국 테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테러리스트, 테러단체 및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개인, 조직, 국가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테러 전담기구를 신설,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테러단체의 공격이나 구체적 테러첩보는 없었으나 ISIS가 4월 3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국민 3명이 포함된 8,785명의 살해명단을 유포한데 이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ISIS 등 테러단체를 추종하거나 테러자금 지원 등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여 2017년 17명이 강제추방되는 등 2010년 이후 유사한 혐의로 조치된 인원이 70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12월 12일 오만 해역에서 아국 화물선을 대상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 기도가 있었고, 필리핀에서 10월 9일과 11월 3일 두 차례 현지 테러단체 아부사아프에 의한 아국선박 납치 기도 및 북한의 테러위협 또한 고조되었으며, 아시아 출신의 외국인테러전투원(FITF)가 노동자·관광객·난민 등으로 국내에 위장잠입하거나 국내 이슬람 커뮤니티 내 ISIS 추종세력에 의한 테러발생 개연성 등 많은 테러위협이 잔존하고 있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18). 또한 급속한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및 사회 부적응자에 의한 한국의 반사회적 자생테러 등은 한국의 큰 테러위협이 되고 있다(양철호, 2017).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법적 토대와 권한 안에서 대테러조직의 구성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게 되었으나, 테러조직의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 예방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데 사전 예방적인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정보수집과 공유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전수일, 2017). 하지만 한국 내 국제테러단체가 주도하는 테러사건의 전례가 없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정하던 각 기관별 조직의 임무를 답습한 법령의 제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테러 조직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한국을 중심으로 대테러 조직과 기관별 임무,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대테러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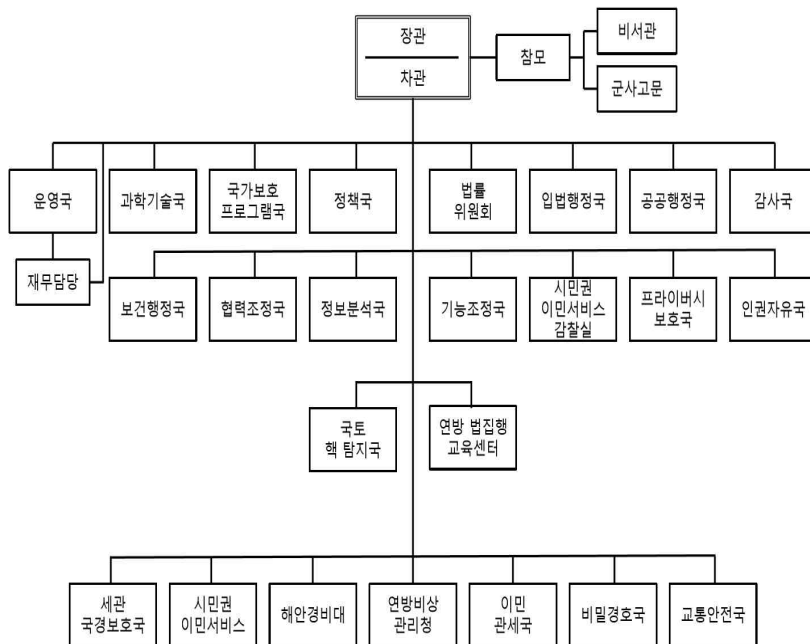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대테러조직체계

출처: 경찰청(2016),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조직·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일명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미국 국토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2002년 국토안보법을 근거로 하여 2003년 22개 정부기관을 통합한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하였다.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테러 핵심 조직은 국가안전보장이사회(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NSC), 국토안보부(DHS),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ODNI) 산하 국가 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NCTC), 연방 수사국(FBI)와 주(州)경찰,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이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대통령 직무실 산하 위원회로서 2001년 10월 29일 설립된 국토안보위원회(HSC:Homeland security council)는 테러 억제 및 국토안보에 대한 조언을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경찰청, 2016).



[그림 2] 국토안보부 조직도

출처 :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참조 및 연구자가 재구성.

국토안보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를 보좌하는 국토안보부 차관과 참모인 비서관, 군사고문으로 구성된 장관실이 있으며, 상원의 동의와 검토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정보분석 및 기반시설보호차관(Under Secretary for Information Analysis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 과학기술차관(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국경&교통차관(Under Secretary for Border and Transportation Security), 비상대비대응 차관(Under Secretary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시민권 이민서비스 국장(A Director of the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운영차관(An Under Secretary for Management), 12명 이하의 차관보, 법률위원회에 임명되는 총괄법률고문의 차관을 임명하고, 감사관(Inspector General), 해안경비 사령관(Commandant of the Coast Guard), 비밀경호국장(A Director of the Secret Service), 정보책임관(A Chief Information Officer), 재무담당관(A Chief Financial Officer), 인적자원책임관(A Chief Human Capital Officer), 인권자유담당관(An Officer for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이 각각 해당 부서의 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

국토안보부는 크게 국경교통안전분야, 비상계획 대응분야, CBRN²⁾ 대응분야, 정보분석 및 기반시설보호분야, 운영분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경교통안전분야는 ① 테러리스트의 입국과 테러도구의 유입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 ② 이민관련 업무관리 및 세관업무의 효율적 시행, ③ 합법적 운송과 상업 활동의 효율성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계획 및 대응분야의 경우 ① 긴급상황 대비 준비태세의 확보와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 평가, ② 대형재난에 대한 지휘, 의료 지원체제 감독, ③ 연방정부와 민간분야의 협력강화, 상호 운용이 가능한 통신기술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 조직으로는 운영국, 과학기술국, 국가보호 프로그램국, 정책국, 법률 위원회(General Council), 입법행정국, 공공행정국, 감사국, 보건행정국, 협력조정국, 정보분석국, 기능조정국, 시민권&이민서비스 감찰국, 프라이버시 보호국, 인권자유국, 국토 핵 탐지국, 연방법집행 교육센터, 세관 국경보호국, 시민권 이민서비스, 해안경비대, 연방비상관리청, 이민관세국, 비밀경호국, 교통안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미국 국토안보법(PUBLIC LAW 107-296—NOV. 25, 2002, SEC. 103. OTHER OFFICERS).

2) 화학(Chemical), 생물학(Bacteriological), 방사능(Radiological), 핵(Nuclear)을 말한다.

III. 이스라엘의 대테러 조직체계

이스라엘은 1948년 국가설립 이후부터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 효과적인 대테러를 위하여 이스라엘 의회인 kneset은 1948년 테러방지법령(Prevention of terrorism ordinance 5708-1948)을 제정하고, 비상권한법(Legislating the Emergency Power(Detensions)Law 1979)과 구금법(Detention Law 1979)을 통해 테러법에 대한 구금과 체포, 대응권한 등을 강화해 나갔으며,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자금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테러자금 금지법(Prohibition on Terror Financing Law 5765-2005)을 제정하고, 2016년 앞서 제정된 테러관련법을 통합하고 테러단체,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제압을 위한 테러와의전쟁법(Combating terrorism Law 5776-2016)을 통해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이스라엘 의회 홈페이지 참조 및 연구자가 재구성, 2018년 11월 28일 검색).

이스라엘은 총리를 기반으로 하는 내각제 국가이며, 이스라엘 대테러 조직의 핵심 조직은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안보위원회(NSC:National security council)와 NSC내에서 대테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테러국(CTB:Counter terrorism bureau)이다.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활동은 2008 년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법 (National Security Council Law of 2008)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수년 동안의 역사적인 보안 및 정치적 사건에 기초하여 국무총리, 정부, 및 내각의 행동과 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국가안보회의는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부의장, 법률, 전략개발 및 조직, 정보·통합 각료위원회, 방문 및 대외관계, 외교정책, 국내정책, 보안정책, 국경수비 및 대테러로 구성되고, 국경수비 및 대테러 담당관이 시민분야 중점 비상상황 및 테러리스트 사건 처리, 기관 간 협조 조정, 총리, 정부 및 대테러위원회와 함께 비상사태 대비 본부 역할 수행과 대테러 정책준비 및 결정, 민방위 및 경제기능 연속성 보장정책 수립,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해외테러 및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이스라엘 NSC 홈페이지, 2018년 11월 23일 검색).

대테러국은 구체적으로 정보, 국내, 교통, 테러, 기술, 연속성 및 자원관리, 국제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은 역할을 시행한다.

<표 1> 국경수비 및 대테러 부문

| | |
|---|---|
| 정보 (Intelligent) | 국내 및 해외테러정보 통합관리, 테러위협분석, 해외여행경고 |
| 국내 (Home front) | 안보 및 비상 상황 대비 긴급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최상의 서비스를 유지보장 |
| 교통 (Transitions) | 테러리스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육·해·공 국경이동·국내 출입방지활동 및 관계기관협력 및 조정(보안울타리 및 가자지구) |
| 테러 및 뉴테러 (Non-conventional terrorism and terror ism) | 전통적 테러 및 신종테러, 위협요소 대응 및 비상시 협조 |
| 기술 (Technology) | 대테러대응, 민간인보호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적 통합 및 개선 |
| 항공, 해상, 국토보안 (Aviation, sea and land security) | 항공, 해상 등 VIP 및 수송보안 관련 통합 및 협조 시민안전 시스템 개선 |
| 연속성 및 자원관리 (Functional continuity and ener gy) | 국가비상상황에 대한 에너지 지속성 확보 정부 및 기반시설 기능지속성 보호 보안평가 및 개선 |
|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 국제협력유지(LUTAR) 및 국내전선 보호 |

출처: 이스라엘 NSC 홈페이지 참조 및 연구자가 재구성.

이스라엘은 군(아만), 경찰(신 베티), 정보(모사드)의 3개 보안기관이 인간정보(HUMINT)와 신호정보(SIGINT) 등 정·첩보수집과 공작활동을 통해 대테러 정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대테러정보활동은 경찰 정보기관인 신 베티가, 군사 대테러정보활동은 군 정보기관인 아만이, 국외 대테러정보활동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각각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 베티는 샤박(Shabak) 또는 ISA(Israel security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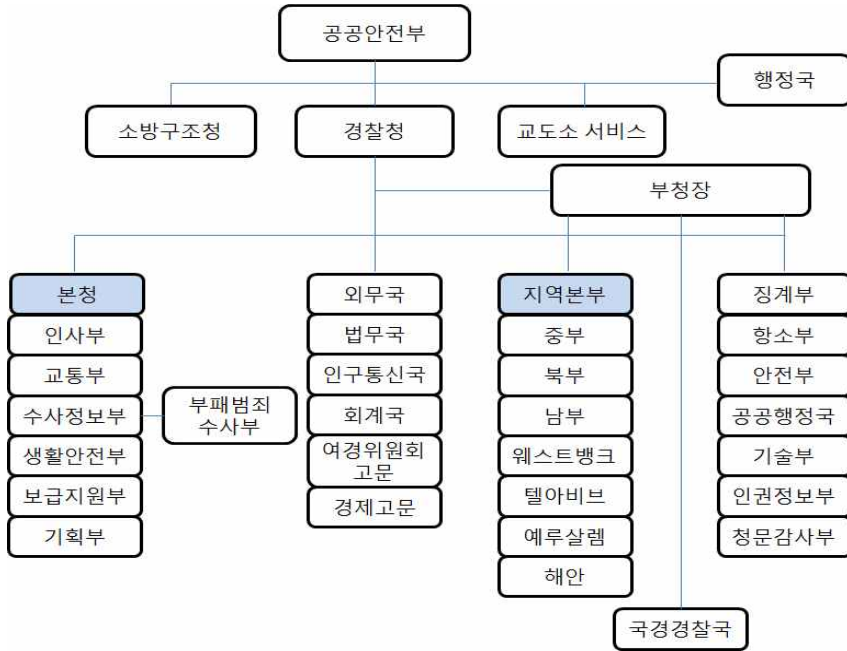
있으며,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직속정보기관으로, 이스라엘의 국내 대테러와 용의자심문,公安업무, 내부보안과 정보, 첩보, 경호, 전략자산, 교통수단, 보안허가, 전략자산의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모사드³⁾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테러예방과 적 정보획득, 비밀활동, 대테러, 인간정보의 수집을 담당하고 1,500~2,000명 규모의 인력과 정보수집부, 정치활동부, 통신부, 특수작전부, 심리전부, 연구부, 기술부서로 조직되어 있다(ISA 홈페이지, 2018년 11월 22일 검색).

군사정보국인 아만은 군 정보기관으로 인력, 자산, 능력에 있어 이스라엘 내 가장 큰 규모의 정보기관으로 약 7,000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인간정보(Hunmint) 뿐만 아니라 신호정보(SIGINT) 중심으로 공중정찰기 등의 첨단장비를 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이스라엘 대테러 정보수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로, 정부와 IDF에 수집된 정보와 상황평가를 통한 경고사항을 매일 제공하며, 조직은 8200부대, 9900부대, 504부대 3개의 부서로 구분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스라엘 군사정보국 홈페이지, 2018년 11월 22일 검색).

군사정보국의 가장 큰 부서는 정보수집부서인 8200부대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정보수집방법과 개발, 분석, 처리, 공유역할을 담당하며, 전시 중에는 신속한 정보처리와 공유를 위하여 전장에 합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략정보를 얻기 위해 적의 배후에 깊은 정찰을 실시하는 현장 정보 수집 하는 군 대테러 특수부대인 Sayeret Maktal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테러 대응기관으로는 크게 국가경찰(INP), 군(IDF), 국경경찰(BP)이 각각의 지역적 분류로 구분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일반적인 대테러사항은 경찰이 담당하나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경우 군이 대테러를 담당하도록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각 기관간의 협조체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되는 민간조직인 '시빌가드'를 통해 경찰과 함께 이스라엘 국내안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 모사드의 정식명칭은 '중앙공안정보기관'(Central Institute for Intelligence and Security, המוסד למודיעין ולתפקידים מיוחדים)'이다.



[그림 3] 이스라엘 공공안전부(ISP) 및 국가경찰(INP) 조직도

출처: 이스라엘 정부 홈페이지 참조 및 연구자가 재구성

이스라엘의 공공안전부는 정부조직으로서 이스라엘 경찰과 교도서비스, 소방구조청의 상급기관이며, 공공안전에 대한 통합 국가기관으로서 재난, 화재, 범죄, 폭력, 마약방지, 화재, 구조, 수사 및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국경경찰이 소속된 공공안전부(MPS: Minister of Public Security)의 소방구조청은 재난, 테러, 사고 등의 상황에서 소방, 구조, 응급치료 서비스와 위험물질유출 방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경찰은 공공안전부(המשרד לביטחון הפנים)소속 경찰기관으로 이스라엘 군 여단으로 설립되어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출범했으며, 영토 전역을 중부, 남부, 북부, 웨스트뱅크, 텔아비브, 예루살렘, 해안까지 7개 관구로 분할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각 지역은 두 개에서 네 개의 하부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경찰 업무는 테러 및 범죄예방, 범죄조사, 범인추적 및 검거, 교통통제 및 감독, 감옥운영관리, 공공안전 등의 광범위한 국토안보 임

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긴밀한 협조체제와 중앙집권시스템으로 특정수준의 대테러 지휘 기능을 위임받아 ①초동조치, 차단 및 테러원인 처리 ②최초공격시도에 대한 대응 ③최초공격발생에 대한 대응의 3가지 원칙 안에서 대테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⁴⁾, 테러 공격이 잦은 이스라엘의 특성상 경비 및 대테러작전의 비중이 타국 경찰에 비해 높고, 국가경찰은 일반적으로 Blue Police라고 하는 일반경찰과 국경경찰로 구분되며, 민간조직인 시빌가드(Civil Guards)와 특수부대를 지휘하고 있다(이스라엘 국가경찰 홈페이지, 2018년 11월 23일 검색).

경찰의 조직은 경찰청장 직속으로 징계부(בית דין למשמעת), 항소부(בית דין לערעור), 안전부(בטיחות), 공공행정부(לציבור, שירות), 기술부(מנהל טכנולוגיות), 인권정보부(ביק), 청문감사부(חטיבת התביעות), 본청 내 인사부(מ), (שאבי אנוש), 교통부(תנועה), 수사정보부(חקירות ומודיעין), 부패범죄수사부(להב 433), 생활안전부(וקהילה, מבצעים שיטור), 보급지원부(תמיכה לוגיסטית), 기획부(תכנון וארגון)와, 7개의 지역경찰본부, 국경경찰국(משמר הגבול), 외무국(קשרי חוץ), 법무국(ייעוץ משפטי), 인구통신국(תקשורת ואוכלוסיה), 회계국(חשבונות), 여경위원회고문(לע, יועצת המפכ"ל), 경제고문(כלכלי, ייעוץ)으로 구성되며, 2017년 기준으로 31,195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국경경찰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제기되었던 국경보안의 이슈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Book crops라 불리는 헌병대 창설 후 1950년 경찰로 이양되어 설립되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국경경찰은 군의 보조역할을 통해 국경지역의 보안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지휘통제체계로는 국가경찰의 지휘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규모는 국가경찰의 약 1/3을 차지하고 임무의 특성상 일부는 군으로 보충되기도 한다.

국경경찰국에서는 대테러 및 인질구출 특수부대인 야맘(Yamam)과 대테러 수사부대인 야마스(Yamas), 기동순찰대인 야삼(Yasam), 대테러 전술협상팀인 사막(Sama g), 그리고 정보수집 및 요격부대인 메틸란(Matilan) 등 대테러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대, 사마리아, 가자 지구의 지역본부 국경경찰 지휘관은 군 기관인 IDF명령에 따라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IDF 홈페이지, 2018년 11월28일

4) David Weisburd, Tal Jonathan, Simon Perry(2009), The Israeli Model for Policing Terrorismsage journals.

검색).

시빌가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민간보안조직으로, 테러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4년 창설되어 일반경찰업무, 전문분야(구조, 재해복구, 다이버, 사이버 등), 경찰정보 및 행정, 국경경찰, 교통, 수사 및 정보수집(마약, 재산침해, 청소년범죄 등), 순찰의 7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순찰, 도로봉쇄, 지역보안활동, 주요행사, 학교폭력 및 교통분야 등 전 분야에서 국가경찰을 지원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빌 가드는 경찰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국가조직에 속하지는 않으나 경찰의 보조적인 조직으로서 활동하며, 무기, 장비, 훈련은 국가경찰에서 지원하고, 경찰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이후에는 필요시 의심 인물에 대한 체포 등 일부 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경찰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29,950명의 시빌 가드가 있으며, 이 중 8,985명이 보안관련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이 사건현장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초기대응활동과 순찰 등 1차적인 보안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IV. 한국의 대테러 조직체계

한국의 대테러조직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에 대한 테러방지를 위하여 1982년 1월 22일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 하 테러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인 상임위원회,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테러사건 대응조직인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대테러특공대, 협상팀,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대화생방 특수임무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하여 각 기관별 대테러조직이 구성되었다.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활동의 권한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주장과 국민적 의식이 증대되었으며, 대테러활동 중 정보활동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자 2005년 지침의 개정을 통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배포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설립되었다.

2008년에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위해 소방방재

청에 긴급구조대를 설치하고, 테러사건 협상요원의 양성·확보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방사능테러 대응에 관한 주무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임무 및 기능을 이관하고, 화재방대응 특수임무대를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개정하였다.

2013년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임무·기능 중 일부를 이관하고, 2015년에는 국가재난관리체계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을 개편하고, 인명 구조 및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등에 관한 임무를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폐지하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전담조직)에 따라 대테러 전담조직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기관별 대테러예방과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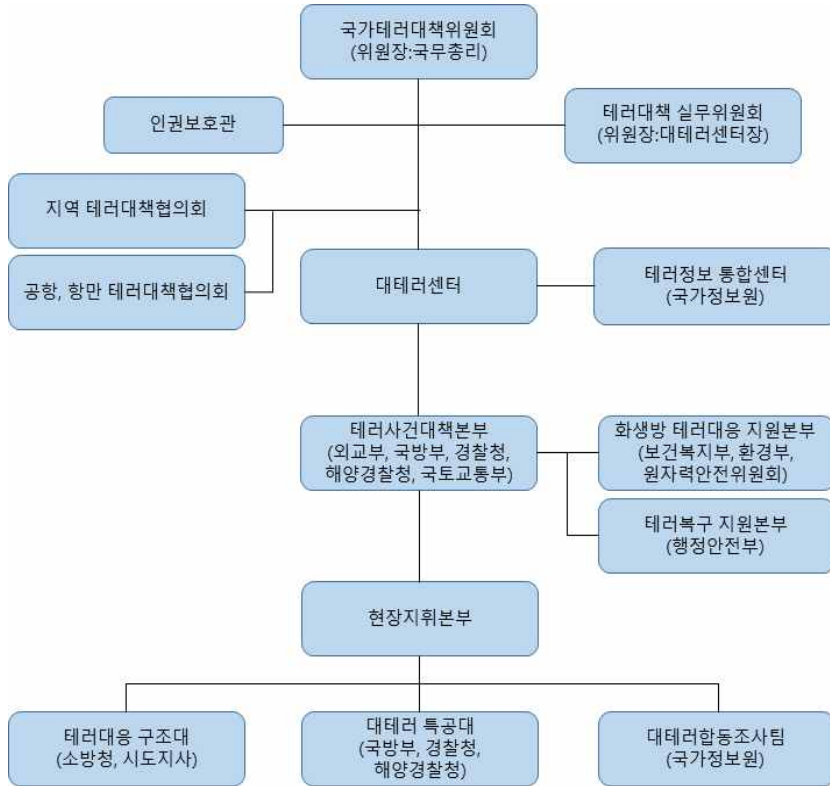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던 해양과 소방 기능이 다시 각각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으로 분리, 독립되면서 해양테러의 대응은 해양경찰이, 소방 및 구조기능은 소방청이 담당하도록 임무가 변경되었다.

한국의 대테러 조직의 경우 대테러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시하는 회의기구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 대테러활동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 대테러조직 중 가장 상위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실무위원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테러센터와 테러정보수집과 전파 등 업무를 담당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공항·항만의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대테러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와 지자체의 대테러업무 지원과 협조를 위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가 있다.

대테러 정보기관으로는 국가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테러정보수집, 전파, 공유 및 테러경보발령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정보를 대테러센터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중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군의 보안, 방첩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범죄 수사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경찰의 경우 국내치안정보를 다루는 정보국과 북한 및 안보관련 보안정보를 다루는 보안국이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

다(이치영,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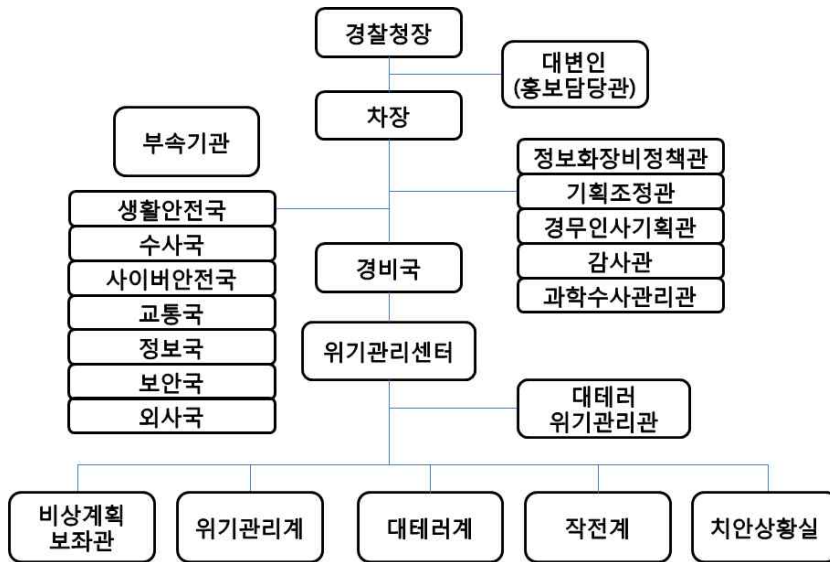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대테러조직체계

출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참조 및 연구자가 재구성.

대테러 대응기관으로는 분야에 따라 각 관계기관이 담당하는 5개의 테러사건 대책본부(국외 : 외교부, 국내일반 : 경찰청, 군사 : 국방부, 해양 : 해양경찰청, 항공 : 국토교통부)와 CBRN(Chemical, Bacteriological, Radiological, or Nuclear) 관련 특수상황 지원하는 화생방테러대응 지원본부(보건복지부 : 생물학, 환경부 : 화학,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행정안전부, 소방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구조·구급·소방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테러복구 지원본부,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통제하는 현장지휘본부와 테러진압 및 대응활동을 위한 군사, 경찰, 해경 특공대, 응급상황 및 인명구조를 위한 테러대응구조대 및 대테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대테러 합동조사팀으로 구분되어 대테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 경찰청 대테러대응 조직도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2018년 11월 28일 검색).

<표 2> 위기관리센터 부서별 임무

| 부서 | 임무 |
|----------|-------------------------------------|
| 비상계획 보좌관 | 군 협력 관련업무 등 작전 관련 센터장 보좌 |
| 위기관리계 | 위기정책기획 및 총괄조정 재난·비상소집·민방위 등 |
| 대테러계 | 대테러 정책 기획 및 연구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경비 |
| 작전계 | 비상대비, 통합방위 작전부대 운영 및 교육훈련 |
| 치안상황실 | 치안상황접수·전파 중요사건 초동조치 |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2018년 11월 28일 검색).

경찰의 대테러활동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현장지휘본부 설치·지정, 대테러특공대(화생방, 테러대응·테러리스트 진압, 인질구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경비국 내 위기관리센터에서 담당하며, 비상계획보좌관과 위기관리계, 대테러계, 작전계, 치안상황실로 구분되어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상계획 보좌관의 경우 군 협력 관련업무와 대테러작전관련 센터장 보좌업무를 담당하고, 위기관리계는 위기정책기획 및 총괄조정, 재난·비상소집·민방위 등의 업무를, 대테러계는 대테러 정책 기획 및 연구를,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경비를, 작전계는 비상대비, 통합방위업무와 작전부대 운영 및 교육훈련을, 치안상황실은 치안상황접수·전파, 중요사건 초동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V. 분석 및 시사점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의 대테러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정보기관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경찰, 행정기관의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정보통합기구의 존재와, 정보통합기구의 장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테러정보와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분석, 전파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군사, 경찰, 행정기관의 정보기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테러정보활동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만이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단일 정보기관에 의하여 대테러정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응기구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테러활동의 범위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국외 테러사건의 경우 군사기관이 대응을 담당하며, 국내의 경우 재난대응, 소방, 구조, 범죄, 위험물관리, 화생방 등의 모든 기관들이 통합된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테러사건을 국외, 군사, 일반, 항공, 해양의 5가지로 분류하여 각 기관이 대테러본부를 운영하고 타 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능적인 통합을 실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을 이념적,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대상인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을 명확하게 선정하여 정보활동을 통해 테러전략과 수단, 특징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대테러대응전략을 수행

하고 있으며, 해외, 국경, 국내의 지역개념을 전담하는 군, 경찰의 임무분담 및 조직구성과 국가적 대테러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국가기관의 장비·훈련 등의 지원과 일부권한을 승인하여 민간자원과 예비군 또한 국가 대테러활동의 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초동조치와 테러리스트 공격저지·체포활동이 국가의 전체적인 자원이 동원되는 시스템화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 볼 때 사실상 대테러활동은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여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테러활동의 총 결정권자로 지정하여 보다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이 어렵고,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한의 행사에 있어 제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테러활동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협조와 공유체제를 통합정보기관에서 처리하는 반면에, 한국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소속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테러정보수집, 분석, 전파활동에 그쳐 사실상 단일 기관에 의한 정보활동과 일방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협조나 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군사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의 정보기관인 정보국과의 정보협조 또는 공유체제가 미흡하고, 경찰청의 경우 대테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 공유하는 권한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국가의 대테러정보활동이 단일기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통합정보기관의 설립을 통해 군사, 경찰, 정보기관의 정보통합 및 공유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개정과 정보기관간의 조직적·기능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청장 직속의 대테러관리관·대테러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의 경찰기관에서 수집한 대테러정보를 분석·공유하며(함혜현, 2017), 대응단계에서 특히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 현장대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권정훈, 2017).

또한 외국은 대테러활동을 국토(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는데 비해 한국은 테러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각 기관별 테러대책본부를 편성하고 있어 국토안보를 위한 대테러활동이 통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테러교육, 대응절차, 지휘방법, 용어, 지원체제 등 국내에

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활동은 경찰의 지휘를 통해 지휘통제체제를 일원화하여 현재 조직적,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대테러조직의 기능적 분산 현상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테러센터가 대테러활동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한이나 통합정보관리, 교육 등의 실질적인 대테러활동의 중심에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권한이나 조직구성의 측면에 있어 매우 협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국가적 대테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안보실 산하로 이전하고,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대테러정보와 정책, 권한강화와 결정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대테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차적인 대테러 초동조치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청 경비국 산하의 경비과·위기관리센터·경호과·항공과·테러대응과의 전문성과 전문인력, 예산,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861호, 2018년 2월 22일)」에 나온 바와 같이, 테러취약시설, 적용범위, 업무분장, 다중이용건축물등의 분류(A급,B급,C급), 테러취약시설 지정 등의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테러취약시설의 안전활동, 단계별 경력배치 기준, 시설 관리자·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방호실태조사, 지도점검 기본방침, 지도점검방법, 중점 지도점검 사항, 국가중요시설 지도점검, 공관지역 방호실태조사, 미군 관련 시설 방호실태조사, 기타 테러취약시설의 관리 및 지도점검, 시설 관리자 등 개선 권고, 대테러 훈련(FTX) 및 테러예방교실, 대테러 훈련 방법, 훈련시 고려사항, 테러예방교실, [별표2] 테러취약시설 단계별 경력배치 기준, [별표3] 테러취약시설의 중점 지도 점검 사항, [별표4]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 점검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다중이용건축물 등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중요시설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 [별지 제4호 서식] 대테러 모의훈련(FTX) 체크리스트 등의 전반적인 테러대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미래의 4차 산업의 혁명에 의한 새로운 테러유형 및 위협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새롭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에 따른 경찰청의 역할도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2016).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조직·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온나라 정책연구.
- 권정훈 (2017). 한국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 한국경호경비학회지, No.51.
- 양철호 (2017). 테러동향 변화에 따른 군·경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향. 치안정책연구, Vol.31 No.3.
- 이만중 (2018). 국제테러의 환경변화 예측과 대테러 미래전략. 한국테러학회보, Vol.11, No.1.
- 이치영 (2017).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조직 비교분석.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남식 (2015). 폭력적 극단주의 ISIL의 발호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전수일 (2017). 이슬람 테러조직 성향분석과 한국의 대테러 정책연구: ISIL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테러정보통합센터 (2018). 2017년 테러정세. 국가정보원.
- 하상균 (2018). 정보주도형 대테러활동의 사전예방적 기능과 역할. 한국테러학회보, Vol.11, No.2.
- 함혜현 (2017). 경찰의 대테러 정보수집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보기관과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66권.

2. 기타자료

-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3.3). 법률 제14071호.
- 미국 국토안보법(PUBLIC LAW 107-296—NOV. 25, 2002, SEC. 103. OTHER OFFICERS).
- 미국 국토안보부 홈페이지(<https://www.dhs.gov>).
- 이스라엘 테러방지법령(Prevention of terrorism ordinance 5708-1948).
- 이스라엘 비상권한법(Legislatng the Emergency Power(Detensions)Law 1979).
- 이스라엘 구금법(Detention Law 1979).

이스라엘 테러자금금지법(Prohibition on Terror Financing Law 5765-2005).

이스라엘 테러와의전쟁법(Combating terrorism Law 5776-2016).

이스라엘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il>).

이스라엘 NSC 홈페이지(<http://www.nsc.gov.il>).

이스라엘 방위군 홈페이지(<https://www.idf.il>).

이스라엘 국가경찰 홈페이지(<https://www.police.gov.il>).

이스라엘 ISA 홈페이지(<https://www.shabak.gov.il>).

이스라엘 군사정보국(IDF) 홈페이지(<https://www.idf.il/en/>).

이스라엘 의회 홈페이지(www.knesset.gov.il).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terrorism System and Organization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Lee, Chi Young*·Jung, Sung-Bae**

If you look at the organization system of counterterrorism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n the case of intelligence agencies, the U.S. and Israel, the existence of an intelligence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intelligence agencies of military, polic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and radio systems to directly report terrorist information and situations to the president, and in Korea, the case of military, polic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telligenc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For response organizations, the U.S. and Israel separated the scope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from home and abroad and operated by military agencies in the case of overseas terrorism, including disaster response, fire fighting, rescue, crime, dangerous goods management, and chemical production departments, and in Korea, Korea was classified as five different types of terrorist organizations to operate and support the integration of func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Israel, the war on terror is clearly selected by terrorist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which are not ideological and abstract, but practical targets, to carry out effective counterterrorism strategies through information activities, and showed that military, police task division, organization, and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s are connected organically with the concept of terrorism in charge of overseas, border, and domestic regional concepts. In particular, it was composed of a systemized organization in which initial actions and terrorist attack prevention and deployment activities were mobilized as a whole of the country's resources, as private resources and reserve forces were also allowed to act as an axis of the state'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by approving some authority, such as equipment

and training of state agencies.

Looking at these characteristic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exercise of authority, as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re in effect to establish a preventive and counter-response system by mobilizing all national capabilities, and in Korea,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more smooth cooperative system by designating the prime minister as the total arbiter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t is often necessary for the president to make decisions.

In addition, the problem is that while foreign countries are mobilizing their national capabilities by dividing anti-terrorism activities into national territory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Korea is organizing a counter-terrorism headquarters for each agency by segmenting the areas of terrorism. In detail, activities on domestic terrorism, such as counter-terrorism education, response procedures, method of command, terms and support systems, should be conducted by the police to unify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us mitigating the phenomenon of functional decentralization of the anti-terror organization, which is now emerging as an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problem.

Key Words: Counterterrorism,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Public Security.

*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Researcher(The 1st Author)

** DaeJeon University Instructor(The Corresponding Author)

한국 주변의 무력 확충의 대비한 핵무장에 관한 연구

정 주 호 · 이 승 진

한국 주변의 무력 확충에 대비한 핵무장에 관한 연구

정 주 호* · 이 승 진**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응방법으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지뢰, NLL 침범 등 군사적 도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번 2017년 9월 3일 풍계리에서 실행된 제 6차 핵실험은 그 정도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리틀 보이(Little boy)’의 10배에 이를 정도라고 추정된다. 핵실험 추정치보다 작은 규모의 핵폭탄이라 할지라도 서울 상공에서 터질 경우 최대 630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고조되는 남북긴장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대상이 핵무기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가능 한 군사정책인 ‘3축 체계’와 ‘전술 핵 재배치’, 그리고 ‘자체 핵무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 ‘자체 핵무장’에 무게를 두어 자체 핵무장을 완료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아볼 것이다.

주제어: 제6차 북핵실험, 군사정책, 3축 체계, 전술 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제1저자)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대학원 석사과정(교신저자)

| 목 차 |
|--|
| I. 서 론 II.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III. 결 론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인공지진이 관측되었다. 지진과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이 인공지진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전형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식 발표를 통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수소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여러 나라들이 각각 폭발력의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였다. 미국 지질 조사국(USGS)은 12시 30분 발생한 풍계리 지진에 대하여 진도 6.3의 폭발로 인한 지진이라고 규정하였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지질물리학 관계자는 ‘타스 통신’을 통해 “자동지진측정기가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을 포착했다.” 고 말했다. 중국 지진국에서는 “북한에서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규모 6.3 지진, 진원은 0km의 지진이 발생했다.” 라고 밝혔다.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어, 이번 지진 발생시각은 12시 29분 57초이고, 규모는 6.1, 진원은 0km라고 발표했다. 여러 나라들의 지진분석과, 핵실험 관련 자료들을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150~200 kt 의 폭발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결과가 전략핵무기의 기준인 100kt의 폭발력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한국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진도는 5.7로 50kt 규모의 폭발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 주변 3국(러시아, 중국, 일본)의 관측 수치와 크게 차이를 보인다. 이전의 핵실험 때에도 한국정부의 발표는 여타 주요국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것은 폭발력의 축소발표를 통해 국민의 두려움 감소를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국가들을 긴장시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 전함은 물론이고 핵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긴박해 지는 남북 정세 및 주변 국가들의 역학적 긴장구조도 아래 자체 핵무장에 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2장에서는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재 채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법인 '3축 체계'와 가능한 전략인 '전술 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을 마친 국가들(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다. 이후 '자체 핵무장'에 대한 예상되는 반대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할 것이다.

II.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1.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1)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키워드로 대북정책을 펼쳤다. 기본 대북정책을 민족의 통일로 방향을 잡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에게 포용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북한도 이에 긍정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통적으로 시행되었던 억지(deterance)전략과는 사뭇 다른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신의 저서 ‘공화국 연합제(학민사, 1991)’에서도 보인다. ‘3원칙, 3단계의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 공화국 연방제 방안을 구성한 ‘국가 연합단계, 연방제 단계, 완전 통일단계의 3단계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로 김대중 정부는 흡수통일 배제, 적극적인 화해와 협력추구 등을 실현하기 위해 대화와 접촉을 다방면으로 시도하였으며 남북분단 이후 지속되던 대립관계 및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민족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력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금강산 관광 개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이산가족 상봉 사업’ 등이 있었으며 2001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남북 공동성명을 이뤄내며 그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표 1>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 군사회담 경과 일지

| 구분 | 회차 | 일자 | 장소 | 주요 협의 / 합의내용 |
|----------------|-----|-------------|------|--|
| 장관급 회담 | 1차 | '00.9.24~26 | 제주도 | • 남·북 국방장관회담 공동 보도문(5개항) 채택 |
| 군사 실무 회담 군사 | 1차 | '00.11.28 | 통일각 | • 주요협의 : 남북군사보장 합의서(안) - 남북관리구역 설정 시기·범위, 도로노선 위치, 시설물 건설 / 비무장지대 공사합의 사항 |
| | 2차 | '00.12.5 | 평화의집 | • 주요협의 : 남북군사보장 합의서(안) - 남·북 관리구역 설정/운용, 공동규칙 관련 협의 -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사 간 안전문제 합의서 서명, 발효 합의 / 비무장지대 치외재거 동시확공 의견일치 |
| | 3차 | '00.12.21 | 통일각 | • 우리 측 합의서(안) 설명 및 전달 후 차후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114만에 회담종료) |
| | 4차 | '01.1.31 | 평화의집 | • 주요협의 : 남북군사보장 합의서(안) - 비무장지대 내 관련 사항 협의 등 |
| | 5차 | '01.2.8 | 통일각 | • 동해 및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 ※ 주력개념 관련 이유로 서명, 발효지연 |
| | 6차 | '02.9.14 | 평화의집 | •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 2차례(9.16 / 17) 추가회담 통해 합의서 서명, 교환 및 발효 합의 |
| | 7차 | '02.9.17 | 평화의집 | • 군사보장합의서 문서 교환 / 발효 |
| | 8차 | '02.9.16 | 통일각 | • 군사보장합의서 확인, 1차 교환 및 제 7차 남북군사 실무회담 진행절차 협의 |
| | 9차 | '02.10.3 | 통일각 | •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관련 북측입장 확인 • 철도, 도로 연결 작업 위한 제반사항 협의 |
| | 10차 | '02.10.11 | 평화의집 | • 2차 남·북 장관회담 개최 관련 방방 합의문(안) 비무장지대 균형공사 및 치외재거장비 지원 협의 |
| | 11차 | '02.10.16 | 통일각 | |
| | 12차 | '02.10.25 | 평화의집 | • 남·북 장관회담 방방공동보도문안 및 11월 개최 원칙적 합의 / 철도 및 도로개통관련 협조 |
| | 13차 | '02.11.13 | 통일각 | • 철도 및 도로연결 관련 협조 |
| | 14차 | '02.12.23 | 평화의집 | •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합의서(안) / 통선선 연결문제 토의 |
| | 15차 | '03.1.27 | 통일각 | •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 및 발효 |

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 간 군사적 접촉은 1차례의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15차례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 지뢰제고,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이었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실질적인 군사 위협에 대한 회답이 아닌 최소한의 군사적 협조에 치중한 모습일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 당시 발생했던 북한의 무력도발인 1999년과 2002년 ‘연평해전’ 이후에도 이에 대한 군사적인 억지정책이나 공격적 혹은 방어적 태세를 새로이 구성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억제나 적대성을 당장에 드러내는 군사정책은 햇볕정책의 그늘 속에 가려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화해모드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부는 2001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군사적 차원의 대북 정책은 현재에 와서 결과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여준다.

2)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와 비슷한 노선으로 기본 대북 정책을 펼쳤다.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책, 남북한 공동 번영 실현, 동북아 공동번영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북핵 억지전략을 같이 펼쳤다. 2003년 1월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 핵 문제에 직접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고 미국이 주로 관여하던 북핵 정책을 한국이 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당시 미국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북 응징을 주장하였지만 노무현 정부는 강력한 대북 제재 대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협력을 기본 틀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에 북 핵 문제에 대해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독자적인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2006년 10월 9일 제 1차 핵 실험을 감행한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북 핵 관련국과의 활발한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공통적인 의견을 나누고 한국 주도적인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대북 군사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 국방개혁의 목표는 현대전 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국방력을 첨단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병력 위주의 양적 구조를 기술 중심의 질적 첨단구조로 개혁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4대 중점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 둘째, 국방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군은 전투임무수행에 전념. 셋째, 저비용, 고효율 국방 관리체제로의 혁신. 넷째, 선진 병영문화 창달 등 국방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이 그것이다. 또한 자주국방을 추구하여 대미의존의 완화를 강조하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법을 합의하는 등 국방의 자주화에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의 독자구축을 결정하여 이에 필요한 무기체계들의 도입 및 개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또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지 못하였다.

3)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기본 대북 정책도 전의 두 정부와 동일하게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계승이지만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선 핵포기 후 지원’의 방향을 가진다.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의 개념 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수립하려 하였다.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 비핵 후 개방 3000구상’을 대북 정책으로 견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로 이에 반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 억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북한 미사일이나 핵 실험과 관련한 여러 회담 및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세계에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 개발은 어쩔 수 없다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지속적인 미사일과 핵 도발을 이어나갔다. 이처럼 정부의 ‘선 핵포기 후 지원’정책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남북관계는 한없이 멀어졌다. 또한 아이러니 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 22조원 삭감하고, 정찰기와 호위함 등의 도입을 미루는 등 강경한 대북 정책의 의지와는 반대의 모습의 국방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를 대신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설정

한 KAMD의 체계를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북 핵 억제력을 강화하려 하였으며,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K-9자주포를 이용한 직접 대응과, DDH-991(KDX-3) 이지스함, PKG-711 유도탄 고속함, F-15K의 도입 등 대북 억제를 위한 군사적 대응책을 펼쳤다.

4)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안정적인 경제적 성장 속에 포함된 군사적 대립이라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정책’과 ‘균형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뢰정책’은 남북한의 화해를 저해하는 근본원인이 상호 신뢰의 결여로 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협력 조성의 시초는 바로 이 상호 신뢰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남북 갈등은 북한의 국제규정 위반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의 주관을 보여준다. ‘균형정책’은 지난 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불균형적이었다는 시각에 근거한다. 일 방향적인 대북 정책으로 인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전략도 먹히지 않았고, 강력한 압박에 기초한 전략도 먹히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두 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균형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2015년 묵함 지뢰도발, 2016년 제4차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더욱 적극적인 무력도발을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등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THAAD)를 도입하는 등의 군사적 대응을 보여주었다.

5) 소결

각 정부 모두 지도자 나름의 철학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로 북한은 여전히 핵 실험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자들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포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평가한다.

또한 2020년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에 배치할 것이라 전망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하루 빨리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절대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국가적 차원에서 가능한 핵무기 대응방안 비교

1) 3축 체계

‘3축 체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북 핵 도발 군사 대응책이다. 우선 3축 체계란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으로 구분 지어진다.

(1) 킬 체인(Kill chain)

킬 체인(Kill chain)은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적의 공격징후를 감지하여 해당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의 이동식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기 위해 다목적 군이 특수부대와 인공위성, 정찰기 등으로 탐지를 하여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킬 체인’ 전략은 탐지, 식별, 결정, 타격 순서로 진행된다. 탐지(1분), 식별(1분), 결정(3분)을 5분 안에 마치고 25분안에 타격을 완료하여 총 작전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액체연료 미사일이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하는 데 1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구축된 전략인데 북한이 5분만에 발사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스캐럽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실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10~150km의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공중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말한다. 저고도는 PAC-3(15km)와 M-SAM(40km)으로 방어하고, 중고도는 L-SAM(60km)으로, 그리고 고고도는 최근 미국에서 들여온 THAAD(150km)로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고도에 따라 3단계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조기경보 위성과 지상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및 해상 이지스레이더(KD-3)로 미사일을 탐지하여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를 분석하여 고도에 따라 천궁2,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게 되어있다.

(3)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대량응징보복은 말 그대로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을 한다는 한국의 군사전략이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도입하였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공격을 당했을 때 북한의 지휘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주 목표이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의 지휘부를 집중 타격하도록 시스템 되어 있으며, 명확한 공격 징후를 보이면 선제 타격에도 사용된다. 현무-3 순항 미사일, 현무-2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정밀 유도 타격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림 1> 북한 미사일 방어 '3축 체계'

위의 <그림 1>에서처럼 3축 체계는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우선 킬 체인이 작동한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과 우리나라의 레이더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및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 하지만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된다면 전체 타격이 어려울 수 있고, 스캐럽 미사일의 경우에는 선제 타격이 어렵다. 따라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2단계인 KAMD가 발동된다. 발사된 미사일 또한 위성 및 레이더를 통해 식별하고 작전통제소에서 분석을 하여 공중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하지만 이것도 기술적 결함이나, 계산상의 오류로 실패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본토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3단계인 대량응징보복이 발동된다. 북한의 지도부 및 핵심시설에 집중적으로 보복성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것이다.

그러나 3축 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 시스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정찰 및 탐지이다. 모든 과정은 정확한 탐지 후에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소유의 정찰위성은 한기도 없으며 따라서 모든 정찰 및 탐지를 미군에 의존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3축 체계가 반쪽짜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전시 작전권에 대한 부분도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는 전략에 큰 모순이 있는 것이다.

2) 전술 핵 재배치

6.25 전쟁 직후 미국은 150만에 달하는 중공군과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었다. 최초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어네스트존’ 탄도탄과 M65 280mm 원자포로 알려졌다. ‘어네스트존’의 경우 미사일이 아닌 로켓 형태로 사거리는 37~48km이었다. 이후 1960년대 핵지뢰, 순항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950여발에 이르는 핵탄두가 배치되었고, 1970년대 랜스 단거리 전술 핵탄도탄이 보강되었다. 구형무기들은 폐기되어 그 수는 540여발로 줄었다. 이후 핵탄두 수량은 서서히 줄다가 1991년 미국의 핵무기 감축선언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전량 철수하였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전술 핵무기에 대한 재배치 논의가 활발해졌다. 전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었던 이춘근 박사는 2017년 11월 1일 열린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3가지 핵 대응방안’ 국회 포럼에서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의 핵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2020년이면 북한의 ICBM이 완전한 개발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쓸모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전술 핵 재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말이 의미를 상실하였다. 핵무기를 통한 전쟁은 곧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전략도 기존의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에서 ‘어떻게 전쟁을 피할 것이냐’로 변화했다. 또한 핵이 있는 국가와 핵이 없는 국가 사이에선 아무런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핵이 없는 국가에서는 수비도 공격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선 또다른 핵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NPT에 가입된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인 것이다. 전술 핵 재배치는 북한 핵 도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전략적인 이점이 있다. 북한을 압박리에 도와주는 중국은 당연히 한국의 전술 핵 재배치에 반대 할 것이다. 이런 중국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전술 핵 철수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을 맺을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전술 핵 재배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 핵 재배치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전술 핵무기는 B61-12이다. 이것은 미국이 운용하는 B-1B 전략폭격기로 즉시 사용 가능하며, 우리나라가 운용중인 전투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술 핵 재배치는 여러 위험성도 내포한다. 그중 가장 큰 위험은 핵 참화 가능성이다.金正恩의 잘못된 판단으로 핵무기 공격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크나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방연구원에서 1메가톤급 핵폭탄이 서울 종로구 상공에서 터질 경우 반경 7km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 국방위협감소국(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DTRA)에서 2004년 10월 26일 서울 상공에서 100kt급 핵폭탄이 터질 경우 총 630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 보이(Little boy)’ 급인 20kt의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엔 반경 1.2km가 증발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기 폭발력은 150kt~200kt급으로 추정된다. 단 한발이라도 서울시 상공에서 터질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ICBM연구가 성공을 거두고 미국과 협상을 시도한다면 미국은 한반도 미군철수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핵무기는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는 순간 핵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핵 재배치도 완벽한 북한 핵무기의 군사적 대응방안이 아닌 것이다.

3) 자체 핵무장

우리나라의 북 핵 대응책 중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자체 핵무장이다. 전술 핵 재배치도 결국 미국의 무기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의 ICBM 개발이 이루어지고 미국을 겨누면서 한반도에서의 퇴출을 요구한다면 미국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 핵무기는 그 어떤 재래식 무기와의 견줄 수 없는 강력함을 내포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막기 위해선 결국 핵무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은 국내적으로 국가 구성원의 반발과, 국외적으로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주장을 실현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북 핵 억지수단인 만큼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제 여론 또한 이해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시 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를 시작하려면 박정희 정부로 돌아간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대미불신을 계기로 당시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크게 뒤져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은 핵무기라 생각하고 개발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1972년 이후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주요 핵 시설물 건설을 시작하였다.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하연급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하여 기술협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프랑스의 원자력 엔지니어링 회사와 벨기에의 핵연료 주기 기술 용역 업체를 방문하였고, 인도와 대만에서 NRX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기술을 배우는 등 여러 갈래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도움을 구하였다. 1974년 연간 플루토늄 20kg을 생산하여 2~3개의 핵무기 제작을 가능할 수 있는 규모의 재처

리 시설에 관한 초안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알고 같은 해 12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워싱턴으로 ‘한국이 현재 핵무기 개발계획의 초기단계에 있다.’ 라고 보고하였다. 당시 미국의 방해로 인해 프랑스 벨기에 등의 국가와 진행되던 모든 계약이 파기되었고, 미국은 1975년 4월 한국의 핵비확산 조약(NPT)가입을 체결 시켰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박정희 정부는 비밀리에 핵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고 박정희 대통령 비서의 회고에 의하면, 1979년 1월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1981년 초에 최초의 핵무기를 완성할 것이고, 이때로부터 김일성은 감히 남한으로의 침략을 넘겨다보지 못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시 보안사령관 강창성도 1978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기를 “핵무기 개발은 이미 95%가 완성되었고, 최초의 핵무기는 1981년 상반기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회고한다. 이러한 회고들로 볼 때 우리나라의 핵무기 기술은 이미 1980년대에 제조 가능성이 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 이후에는 미국의 제재와 핵우산 약속,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 수준이 비슷하고 점점 앞서 나가는 추세여서 핵무기 기술개발의 동인이 사라졌다. 그러나 원자력 기술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면 1년 반~2년이면 충분한 수준의 무기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핵무기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으로 만드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재처리 기술로도 모두 가능하다. 김승평 조선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는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방법은 전기분해(건식), 습식 재처리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모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며 “대량생산 시설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험실 수준에서는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재처리 신기술도 갖고 있다. 전류를 흘려 넣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 또한 2000년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실험한 우라늄의 레이저 농축 실험결과 농축우라늄-235를 1kg 얻기 위한 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제조 기술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설계도를 구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한계는 전혀 없다.

3. 자체 핵무장을 마친 국가의 예시

1)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국가를 수립 한 1948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변의 이슬람국가들과 외교적, 군사적 마찰을 빚어왔다. 이러한 국가안보적 불안정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겼다.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린다. 1950년대 중반부터 과학자들을 프랑스에 파견하여 핵기술을 도입하였다. 1957년 미국은 U-2 정찰기로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에서 건설 중인 수상한 사진을 찍어 분석을 하였는데 프랑스의 핵개발 시설과 똑같은 시설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CIA의 조사로 원자로 시설 주변에서 여러 프랑스 기술자를 포착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였고, 케네디 정부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비밀외교전략과 집요한 위장전술로 핵무기 개발을 이어 나갔다. 이스라엘은 현재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o Confirm or No Deny(NCND)’ 전략을 구사하며 정확한 핵 시설과 핵무기 보유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핵기술자 ‘바누누’가 1986년 10월 5일 런던의 ‘선데이 타임즈’에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폭로함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났다. 현재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75개 ~ 200개가량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1983년 남아공과의 미사일 공동개발에서 핵탄두 장착까지 성공해 엄연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2) 인도

인도는 독립 이전부터 핵 개발을 하였으며, 초대 수상인 ‘네루’가 주도하였다. 194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였고, 원자력 위원회를 설립해 기술연수를 담당하였다. 인도의 초기 핵정책은 평화주의 노선에 따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였지만 1962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패하고, 이후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르고 군사적 대치를 하여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다. 그리

하여 1974년 5월 18일 인도 원자력 위원회는 ‘평화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주장하며 15톤 규모의 핵 기폭장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1987년 파키스탄이 중국의 지원으로 핵무기 개발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 3월 5차례의 핵실험을 거친 뒤 자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였다. 이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제재에 나섰고, UN안보리 또한 결의안 1175호로 핵무기 중단을 요구했지만 둘 다 인도에 별 효과가 없었다. 인도 자체가 이미 거대한 강국이었고, 미국의 제재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반대한데다, 국내경제의 비중이 커 경제적 제재 또한 효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후 미국은 ‘미국-인도 간의 핵 합의’를 통해 양국 간 핵 협력을 구체화시켰다. 현재 인도의 핵 전력은 100여개의 핵탄두와 추가적으로 100여기 가량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미사일 기지와 전략전투기를 운용하여 파키스탄과 중국 전역에 핵공격이 가능하다.

3)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1963년 국제 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보증 아래 미국의 원조를 받아 핀스테크 연구단지에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였다. 이어 캐나다의 원조를 받아 두 번째 원자로인 카라치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며 핵 기술 개발의 발판을 마련한다. 1971년 12월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해 방글라데시를 분리 독립시키면서부터 핵개발을 추진한다. 1972년 1월부터 수상이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원자력 다국적 기업인 ‘유렌코’에서 근무하던 ‘칸’ 박사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파키스탄으로 가져왔고 이후 예산을 증가시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감시로 프랑스의 지원마저 끊기며 플루토늄 재처리에서 우라늄 농축기술로 방향을 바꿔 개발을 시작한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파키스탄에 군사기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미국은 이를 조건으로 핵개발을 묵인하였으며, 군사적 경제적 도움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파키스탄은 우라늄 농축에 성공하게 되고 1998년 5월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다. 핵 보유국 선언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에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고 대테러를 위한 아프간 전쟁에 착

수하면서 다시 파키스탄의 협력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핵 통제권에 관여하는 대신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한다. ‘핵 보유 역지’에서 ‘핵 확산 방지’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미국 ‘군비통제협회’에 따르면 2009년 파키스탄의 핵탄두 보유량은 70~90기로 알려진다. 파키스탄은 여타 나라와 달리 플루토늄 핵무기가 아닌 농축 우라늄 핵무기이며 이 기술은 북한으로 전수되어 현재 북한의 핵무기도 농축우라늄 핵무기로 추정된다. 이후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술을 도입하여 2003년 사거리 1,200km에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 ‘가우리(Ghauri)’를 개발하며 인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설정하였다.

4) 소결

위 국가들의 예시를 보면 자체 핵 무장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위에 제시된 세 국가 모두 주변국과 외교적, 군사적 마찰이 있었으며 미국과 전략적 인 동맹관계였다(이스라엘의 경우 유대인들의 미국 자본 침투력이 강했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과 중동국가에 대한 견제를 위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뒷받침 하는 경험적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4. 현재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의 타당성 제시

1) 주적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확실시 되었다

2017년 9월 3일 풍계리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을 측정한 결과 6.3의 진도를 보였으며 이는 핵탄두의 위력이 150kt~200k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미 5차례의 핵실험을 하였으며 매번 성공을 했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번에 실시한 6번째 핵실험에선 그 위력이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핵무기는 현재의 군사적 대응으로 막을 수 없다. 핵무기를 막기 위해선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략이 있다. 이는 미국에 대항하여 소련이 했던 전략이고, 이후 핵무기 보유국들

도 비슷한 사정으로 핵무기 보유 이유를 ‘상호 확증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을 들어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확증 파괴(MAD)’ 전략의 의거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한다.

2) 주변국 모두가 핵보유국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주변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두고 있다. 패권경쟁 구도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동맹국이고,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동맹을 하여 신 냉전이라 불리는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서 현재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국제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아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지만 국가 내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당장이라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만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지경인 것이다. 물론 현재 가장 시급한 안보위협은 북한이지만, 중국과 일본과도 그러한 안보위협이 생길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사드 문제, 독도 문제, 이여도 문제 등 직접적인 국제 분쟁은 중국과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추후에 생길지 모르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서도 자체 핵무장은 타당하다.

3)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

어찌 보면 가장 타당할 수 있는 이유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북한에 대한 완벽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의 ICBM이 개발되기 전까지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에 닿지 않기에 가능한 주장인 것이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은 탄두 무게에 따라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알려진다. 곧 미국 전역이 타격 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후에 북한이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을 겨냥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닌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자체 핵무장을 마쳐 북한과의 핵 군비 경쟁(Nuclear Arms Race)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

5. 자체 핵무장에 따른 예상 대가와 그에 대한 반론

선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체 핵무장을 실행한다면 그에 따라오는 몇 가지 대가가 있다. 1. NPT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과, 그에 대한 제재 조치, 2. 한미동맹의 악화, 3. 일본과 대만의 핵 도미노 가능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자체 핵무장 반대 논리이다.

가.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국제적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번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에게 당한 경제보복이 그 예시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다. 국가의 존립과 경제적 보복은 함께 저울질 할 수 없는 본질이 다른 대상인 것이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핵무기 보유가 타당한 여러 논리가 존재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조치가 생길 수 있으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금방 다시 원점을 회복할 것이다.

나. 한미동맹 악화의 경우 파키스탄처럼 핵무기에 대한 조율과 인도의 경우처럼 평화적 사용 및 보복용으로의 사용을 법제화 한다면 전략적 가치 덕분에 오히려 더 굳건한 동맹체제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 주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또한 핵을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수단이기엔 남이 새로 갖는 것은 이미 가진 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

III. 결론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자신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 주체가 현재는 대한민국이기에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러한 전략적 행위 등을 하는 것이지 후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시도하면서 “미국이여, 그대들의 편에 설 테니 한반도에 관여하지 마시오.” 라고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동맹을 끊고 북한과 새로운 동맹을 맺을 것이다. 미국의 견제 대상은 중국이지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사일 개발 또한 완료하여 ‘상호확증 파괴’ 전략을 취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여 그 가능성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하루빨리 자체 핵무장을 완료하여 북한과의 핵 군비경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전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결국 자체 핵무장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대중 (1991). 공화국 연합제. 학민사.
- 박광득 (2008). 노무현정부와 북 핵문제: 현황 평가. 통일전략, 제8권.
- 성경룡 (2008).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 동북아 논총, 제48집.
- 박근혜 (2011). 새로운 대한민국: 서울과 평양 사이의 신뢰 구축. 외교문제지(Foreign Affairs).
- 이춘근 (2017). 북핵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미국의 전술 핵 재반입.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3가지 대응방안. 국회.
- 조철호 (2000). 박정희 핵외교와 한미관계 변화. 고려대학교.
- 권영호 (2012).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 연구. 경희대학교.
- 박휘락 (2009). 한국의 미사일 적극방어체제 구축방향. 新亞細亞, 16권 3호.
- 이상환 (2004). 제 3세계 국가들의 핵정책 사례연구: 인도-파키스탄 및 브라질-아르헨티나 사례중심으로.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 李靜 (2012). 한미동맹과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SangHun Coe (1995). South Korea was Close to A-Bomb Development in Early 1980s. The Associated Press.

2. 국내문헌

- “North Korea conducts another nuclear test, neighbors say”. 검색일 2017년 10월 4일
동아일보 [황규인의 잡학사전] 北核, 히로시마 원폭 ○배 위력...어떻게 계산?, 동아일보, 검색일 2017년 10월 4일
- [북 6차핵실험] 러시아 당국 "北 인공지진 규모 6.4", 연합뉴스, 검색일 2017년 10월 4일
- <http://news1.kr/articles/?3089736> 검색일 2017년 10월 7일
-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050913114104a49350 검색일 2017년 10월 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9/2016021900376.html 검색일 2017년
10월 7일

【Abstract】

A study on Nuclear Arms preparing for the
expansion of armed forces around Korea

Jeong, Ju Ho*·Lee, Seung Jin**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own nuclear arming' as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Military provocation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ests, missiles, land mines, and NLL invasions have not ceased. In particular, it is estimated that the 6th nuclear test carried out at Punggye-ri on September 3, 2017 is about 10 times that of 'Little boy', which was dropped to Japan in 1945. A nuclear bomb that is smaller than the nuclear test estimates shows that up to 6.3 million people will be killed or injured if they blow up from Seoul. This is a situation that can occur sufficiently between the current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is possible because it is a nuclear weapon.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North Korean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examine the three-axis system, the tactical nuclear relocation, and self nuclear armament, which are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mong them, we will examine the case of countries that have completed their own nuclear arming by focusing on self nuclear armament, and will examine the necessity and necessity of our own nuclear arming.

Key Words: 6th North Korea nuclear test, military policy, 3-axis system,
tactical nuclear relocation, self nuclear armament

* Gachon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Professor (The 1st Author)

** Gachon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Security Course of Master (The Corresponding Author)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및 정립 방안

최 승 희 · 이 재 민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및 정립 방안

최 승 회* · 이 재 민**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정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경비업법에 의한 민간경비 교육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민간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체계의 정립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정립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와 같이 경비업 분류별 전문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현행 통합적 민간경비원 교육을 구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비업체의 경비원 교육·지도·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 이후 교육이수 뿐만 아니라, 경비업무의 분류별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 작성, 시행, 평가, 개선사항에 대한 과목을 추가하고, 교육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비지도사가 현장에서 경비원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장중심의 직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직무교육은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경비업자가 경비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훈련체계 교육인프라 정립이 필요하다.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경비원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강사기준이 잘 나타나있는 것처럼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을 두어 민간경비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이사(제1저자)

** 중앙대학교 공공경찰행정학 교수(교신저자)

이러한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 정립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의 투자, 관계기관 원활한 협조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 논문이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민간경비, 교육훈련, 신입교육, 직무교육, 경비지도사

| 목 차 |
|-----|
|-----|

- | |
|--|
| I. 서론 II.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의 문제점 III. 외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 IV.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 정립방안 |
|--|

I. 서 론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기술의 발달과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각 산업분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에서의 민간경비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민간경비분야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과학 및 정보화는 각종 산업시설을 도시로 밀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집단·지역사회·문화 등에 있어서 이상(異常)현상 즉, 사회병리(社會病理)현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이영오, 2008),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의 양상과 예상되는 범죄피해의 증가로 인하여 여전히 치안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민간보안요원은 신입프로그램교육을 받아야 하며 민간보안요원의 신입교육은 하루 8시간씩 3일, 총 24시간 동안 교육기관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는다.

경비업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경비원의 수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경비원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경비업체는 경비원 교육에 관한 제반시설이나 훈련계획도 없이 단지 수요를 공급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며, 현재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들은 법적기준인 3일 24시간의 단기간의 교육을 받고 근무지에 투입되고 있다. 고객이 만족할만한 경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하는데 현재 경비업체에서는 단기간에 경비원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경비업체들은 경비원 교육에 대해 체계인 교육훈련계획을 개선하고 또한 많은 시간과 물질적으로 투자하여 한 명의 완벽한 경비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경비원을 활용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업무의 환경·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인력으로 바탕을 두어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길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최될 국제행사 또는 민간경비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안전 및 위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문화된 교육의 실시는 경호·경비라는 특수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필요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경호 및 경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 경호원과 국내의 경호·경비업체 및 민간경비 신입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질적 효율성의 제고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의 기본인 방법·방재·방화를 기본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난재해와 테러·범죄 등 다양하고 변화무상하게 나타나는 국제행사·회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및 안전·위기관리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국제행사·회의 및 신변보호 등 임무 수행의 성공을 위한 경비 및 안전대책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경비 교육훈련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모색하고 정립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II.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의 문제점

1.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

일반경비원의 경우 24시간의 신입경비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경비업 분류 중 특수경비업무를 제외하고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현장투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경비업자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비원들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경비업무의 실효성과 전문성, 고객의 신뢰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더욱 많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은 민간경비의 기본취지인 범죄예방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사고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게 되고 사고의 진압을 지연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자격자의 채용으로 인해 경비요원에 의한 범죄가 발생됨으로 경비원의 자질문제도 언급된다(임재성, 2010).

특히 새로 계약된 경비 현장이나 또는 결원이 생긴 경비대상에 신속히 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이력서 등의 서류만으로 경비원을 채용하여 간단한 경비수칙을 숙지시키고 인수인계 없이 그대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어 경비원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할 수 없고 직무교육의 경우 특별히 감독기관의 검열이 있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의 현장에서 간단한 근무내용만을 숙지하는 것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을 경비지도 점검 시 서류로 만들어 제출하고 있는 현실이다(정지덕, 2012).

이러한 현실에서 경비업무의 특성 상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대상에 대한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란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임무수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나,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훈련의 경우 공통업무 중 분야별 전문교육시간은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무교육

보다는 이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업무투입을 실시하기에는 제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강영길(2008)은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교육생의 수준에 맞고 실무중심적인 교육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형식적인 신입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실무교육 만족도 및 실무 적용성, 실무교육 효과가 있는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민간경비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비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1996년 경비협회가 위탁하던 민간경비원교육에 대하여 해당 위탁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청에서 교육시설 등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 경비원 교육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구분하여 공통교육에 포함시켰으나, 경비업의 분류에 따른 전문교육체계 정립이 미비하여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앞서 제기된 전문성 저하와 고객신뢰 감소, 교육 이후에도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증제도(김태환, 박대우, 2005; 이민형, 2009;)의 도입 등 다양한 주장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과정의 정립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모든 업무는 업무에 맞는 실무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과목으로 구성 되어져야 하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을 최소화하여 실무 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업무에 각 부서마다 그 업무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오경록, 2002; 허태구, 2008; 오재환, 2010; 고은정, 2010).

2. 경비업체의 경비원 교육·지도·감독체계 미비

대부분의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통하여 경비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경비지도사와 초임의 경비지도사는 현장 실무경험이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경비지도사 응시연령은 만18세 이상부터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18세인 자가 경비지

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에 경력과 연령이 다양한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뿐 아니라 전문성도 떨어져 형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직무교육에 있어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경비지도사가 교육훈련에 있어서 기존의 내용을 반복하고 교안을 연구 보완 치 못하는 등의 병폐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경비원 직무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교육훈련의 부실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경비지도사에 대한 일정기간 경과후의 보수교육 제도가 마련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현실이다.

1995년 경비원의 지도·교육·감독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 이후, 경비지도사 또한 교육시간과 과목이 축소되었으며, 경비지도사 또한 실질적인 경비업무보다는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경호학, 범죄학, 소방학과 같은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검정을 통해 합격자에 대한 4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경비지도사의 교육 중 분야별 교육은 2시간(기계경비는 3시간), 현장경비업무 5시간의 교육은 경비업무에 대한 현실적인 지도·감독과 현장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오히려 현장 경비원보다 부족할 수 있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3. 형식적 직무교육 이행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는 신입교육 이수 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과 재직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일반경비원은 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여야 하고 그 교육의 전담실무는 경비지도사가 행한다.

실질적으로 경비지도사에 의해 계획된 직무교육이 실시된다는 점은 앞서 제기된 경비지도사의 검정·채용과정과 교육에서 발생하는 단순시험식 선발과 44시간의 단기교육에 따라 나타나는 전문성 확보와 자질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여 경비지도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계획에 의해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직무교육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과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교육은 구체적인 과목명이나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비지도사의 역량 또는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비지도사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경비업체 내에서 경비지도사 업무와 아울러 현장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다. 즉, 경비업자는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지도사의 역할보다는 관리담당자로서의 경비지도사를 선호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비지도사란 경비업체의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대외적으로 선임하는 일개 자격증 소지자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직무교육은 경비업자의 관심사항 밖에 있으므로 교육훈련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감독관청의 점검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4. 민간경비교육 인프라 미구축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은 새로 계약된 경비 현장이나 또는 결원이 생긴 부서에 신속히 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이력서 등의 서류만으로 경비원을 면접·선발하여 장구지급 및 간단한 경비수칙을 숙지시킨 후 그대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홍규, 2013).

경비원을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입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평가결과와 자격요건을 무시하고 저렴한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찾고 있다. 또한 위촉된 전·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실제 재직 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형식적인 교육의 과목이 많다. 교육기관의 교육행정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자격과정의 교육훈련이 아닌 채용 후의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다 보니 교육자세가 피동적이고 평가가 형식적으로 호를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감독관청인 관할경찰서로부터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이들

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민간경비의 질적 발전을 더욱 묘연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민간경비원이 15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전담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시설과 강사를 갖춘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대부분 위탁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교육의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전문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III. 외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

1. 일본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

1) 신입교육 및 현임교육

<표 1> 일본 민간경비 신입교육 및 현임교육

| | | |
|-------------------------|-------------------|-------------------------|
| 신입 교육 (30시간) | 기본 교육 (15시간) | 기본원칙, 자질향상, 법령, 기본지식 등 |
| | 업무 별 교육 (15시간) | 시설경비 |
| | | 교통 및 혼잡경비 |
| | | 호송경비 |
| | | 신변보호 |
| | | 기계경비 |
| 현임 교육 (8시간) ※연 2회 | 기본 교육 (3시간) | 기본원칙, 법령, 통신, 기타 응급조치 등 |
| | 업무 별 교육 (5시간) | 시설경비 |
| | | 교통 및 혼잡경비 |
| | | 호송경비 |
| | | 신변보호 |
| | | 기계경비 |

출처: 일본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제4항 참조 및 연구자가 재구성

경비원 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른 법정교육제도로써 경비업무에 종사하기 전 교육을 받는 신입교육과 현장에서 경비업무에 종사중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임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기본교육’과 ‘업무별 교육’으로 세분화되어 있다(일본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제4항).

이러한 신입교육과 현임교육의 교육내용의 기본교육은 각종 기자재 사용, 경비업법 및 관련법령과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본교육 이후 업무별 교육은 일본의 경비업 분류에 따라 1호(시설경비), 2호(교통 및 혼잡경비), 3호(호송경비), 4호(신변보호)로 구분되어 각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일본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신입교육과 현임교육 모두 내용은 공통적이거나, 신입교육은 공통교육 15시간, 업무별 교육 15시간으로, 현임교육은 6개월마다 공통교육 3시간, 업무별교육 5시간으로 교육시간을 편성하고 있으며(일본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법정교육 외에도 경비원지도 교육 책임자 등에 의한 현장 순찰지도, 면접지도, OJT 및 OFF-JT에 의한 교육의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경비원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일본경비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ajssa.or.jp/>, 2018년 12월 22일 검색).

2) 경비원 지도 교육 책임자

일본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은 ‘일본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체에서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교육 및 지도, 감독 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계획 수립, 지도, 감독 및 교육활동을 위해 경비원 지도 교육 책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제39조, 제40조).

경비 업체는 영업소(기계경비업체는 기지국)마다 경비 업무의 구분(1호~4호)에 따른 경비원지도 교육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제39조), 경비원지도 교육 책임자에 대한 세부적인 검정제도는 공항 보안 경비 업무, 시설 경비 업무, 혼잡 경비 업무, 교통 유도 경비 업무, 귀중품 운반 경비 업무, 핵연료 물질 등 위험물 운반 경비 업무의 6가지 종류 중 해당 업무의 강습수료 및 시험을 통하여 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경비업자는 3년마다 1회 씩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에 선임한 자에게 국가공

안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강습을 받도록 해야 하며(경비업법 제22조 8항), 경비업무의 구분에 따라 최신법령(1H), 치안정세 및 추세(1H), 기자재의 기능, 사용방법, 관리방법(2H), 사고방지사례(1H) 등과 같은 사항을 강습한다(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및 기계경비업관리자에 관한 강습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3항).

2. 영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

영국은 민간경비업법 제3조(2)에 따라 동법에 규정된 경비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 또는 업체의 이사, 파트너 등은 보안산업인증위원회(SIA)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약식기소는 6개월 이내의 징역 또는 5,000유로의 벌금, 법원에 기소될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표 2> SIA분류별 과목, 시간 및 평가

| 구분 | 과목 및 시간 | 교육이수 및 평가 |
|--------|--|---------------------|
| 호송 | 호송경비산업 개요(10H) 민간호송경비산업 업무(18H) | 2개 모듈 이수 / 2회 평가 |
| 근접경호 | 근접경호활동 업무(56H) 근접경호활동 계획, 예방, 지원(76H) 상황관리(8H) | 2개 모듈 이수 / 1회 평가 |
| 출입통제관 | 출입감독 업무(12H) 민간경비업무(10H) 물리적 중재(15H) 상황관리(8H) | 4개 모듈 이수 / 3회 평가 |
| 관제 | CCTV운영업무(14H) CCTV장비사용법(8H) 민간경비업무(10H) | 2개 모듈 이수 / 2회 평가 |
| 보안경비 | 보안관 업무(10H) 민간경비업무(10H) 상황관리(8H) | 3개 모듈 이수 / 3회 평가 |
| 차량도난방지 | 보안관 업무(10H) 민간경비업무(10H) 상황관리(8H) | 3개 모듈 이수 / 2회 평가 |

출처: 영국 SIA 홈페이지 참조 및 연구자가 재구성

영국은 2001년 민간경비산업법의 통과로 인해 독립적인 공공기구인 보안산업 인증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 SIA)가 설립되었고, 위원회의 의장은 내무 부장관에 의하여 선정되며 경비업 허가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SIA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비원의 교육훈련, 경비원 자격증, 경비업 허가, 인증제도, 감독 및 행정형벌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키 홀딩(Key Holding)서비스를 제외한 6개 업무에 대한 경비원 자격증은 현장 자격증(Front Line)과 관리자격증(Non Front Line)으로 구분되며, 현장자격증은 해당 경비업무 및 활동을 담당하는 경비원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경비업무 종사 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관리자격증의 경우 해당 경비업무의 지도,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관리자, 감독자에게 필요한 자격증으로, 실제 경비업무보다는 관리, 감독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실시한다.

보안산업인증위원회(SIA)의 자격증발급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영국 각 지역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잉글랜드의 자격평가인증실(OFQUAL: The Office of the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or) 웨일스의 평생학습 교육부(DELLS: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Skills), 북아일랜드의 교육과정평가 위원회(CCEA: The Council for the Curriculum, Examinations and Assessment), 스코틀랜드의 자격인증(SQA: The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증기관에서는 각 교육과정을 크게 인력경비(Manned Guarding), Key holding, 키 홀딩(Key Holding), 차량도난방지(Immobilisation, Restriction and Removal of Vehicles)로 구분하여 총 7개 분야의 분류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인력경비(Manned Guarding)는 재산의 손실, 파괴와 도난 및 불법적 취득행위에 대한 보호와 호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 및 자산호송(Cash and Valuables in Transit)과 1인 또는 그 이상의 인원 대한 불법적인 상해와 공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접경호(Close Protection), 행사, 공공장소 등 관리서비스를 요구하는 출입통제(Door Supervision), CCTV 모니터링을 통한 관제서비스(Public Space Surveillance, CCTV), 그리고 앞서 분류된 인력경비 활동을 제외한 보안경비서비스(Security Guard)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계, 전기 등

기타 모든 분야의 키(또는 장비)를 관리, 작동,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키 홀딩(Key Holding)자격과 차량도난방지(Immobilisation, Restriction and Removal of Vehicles)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류별 자격등급과 평가, 교육과목과 시간은 위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미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

미국의 민간경비는 범죄활동의 적발 및 예방과 법의 집행을 위해 활용되지만 공공경비와는 달리 법령이나 일관된 관행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 민간경비자문위원회(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 PSAC)에 따르면, 민간경비산업은 일관된 규제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요건이 높고 정교한 기준을 촉진시키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경비원의 높은 이직률, 비효율적인 업무수행, 낮은 승진기회와 훈련수준, 저임금, 전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중시하고 있다. 민간경비분야에서의 훈련과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미국 전역에 걸친 통일된 합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50개 주 중 23개 주는 어떤 형태로든 경비원에 대한 훈련을 요구하고 있고, 14개 주는 비무장 경비근무자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비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는 주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민간경비 산업의 규제는 연방에서보다는 대부분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에 따라 경비산업의 규제와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연방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을 주정부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미국 여러 주의 법령 가운데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알려진 일리노이주의 「사설탐정과 민간경비에 관한 법령」은 경비원 신청자들에게 적어도 20시간의 기본적인 경비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총기류를 다루는 모든 경비요원들에게는 총기류 취급 자격증(firearms certification)을 요구하고 있다. 20시간의 기본훈련 이외에도 담당부서에서 승인한 20시간의 총기류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총기류를 사용하거나 휴

대 또는 소지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면허 교부 및 규제는 주마다 크게 다르다. 약 9개의 주에서 민간경비 기업 또는 민간경비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면허를 소유해야하며 33개의 주가 계약경비기업에게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스스로 경비력을 지니는 등록기업에게는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표 4> 미국 인구밀도가 높은 10개 주 경비원 면허 및 자격요건

| 주 (State) | 면허/등록요건 (계약경비) | 면허/등록요건 (전속경비) | 무기 소지 면허 | 면허 유효 기간 | 무기 소지 유효 기간 | 초기 훈련 시간 요건 | 무기 훈련 | 최소연 령 | 전과 확인 |
|--------------|-------------------|-------------------|----------------|----------------|----------------------|----------------------|----------|-----------------------|----------|
| 캘리포니아 | O | O | O | 2년 | 2년 | 40시간 | 14시간 | 18세 | O |
| 텍사스 | O | - | O | 2년 | 2년 | 30시간 | 10-15시간 | 18세 | O |
| 뉴욕 | O | O | O | 2년 | 2년 | 24시간 | 47시간 | 18세 | O |
| 플로리다 | O | 무장 경비원 | O | 2년 | 7년 | 40시간 | 28시간 | 18세 | O |
| 일리노이 | O | 무장 경비원 | O | 3년 | 1년 | 20시간 | 40시간 | 18세 21세 (무장경비원) | O |
| 펜실베이니아 | 무장 경비원 | 무장 경비원 | O | - | 5년 | - | 40시간 | 18세 | O |
| 오하이오 | O | - | O | 1년 | 1년 | - | 20시간 | - | O |
| 미시건 | 분기별 명부제출 | - | - | - | - | - | - | - | - |
| 조지아 | 무장 경비원 | 무장 경비원 | O | - | 2년 | 24시간 | 15시간 | 18세 21세 (무장경비원) | O |
| 노스다코타 | O | 무장 경비원 | O | 1년 | 1년 | 16시간 | 20시간 | 18세 21세 (무장경비원) | O |

출처 : 김동희(2015). 재인용.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마다 면허/등록요건이 상이하며 무기소지 면허는 미시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소지하도록 요건을 두고 있으며, 무기소지의 유효기간은 1년부터 7년까지 다양하다. 무기훈련과 초기훈련 시간에 대한 시간은 모두 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소연령은 일반경비원의 경우 18세 이상, 무기를 소지하는 무장경비원의 경우 21세를 요구하고 있다.

4. 시사점

일본, 영국, 미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을 살펴볼 때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경비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본교육 이외에도 각 업무별 전문화교육을 따로 편성하고, 경비전문가 양성을 위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5시간의 기본교육 이후 각 경비업무에 대한 15시간의 업무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경비업무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직무교육을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직무교육(3시간)과 업무별 직무교육(5시간)으로 구분하여 기본직무능력과 업무별 직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비원 교육 또한 SIA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6가지 경비업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27시간에서 최대 140시간의 모듈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비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 또는 업체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업무 시에 항상 자격증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자격증(Non Front Line)을 따로 두어 경비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보다 지도·감독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타 경비관련 자격 취득과 달리 관리감독자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간경비산업에 개입을 하며, 주로 주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제 조항을 포함한 연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경비원의 전과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규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민간경비원 선발 및 교육훈련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지도·감독·교육하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 영국의 교육훈련체계를 살펴보면 ①민간경비 분야별 전문교육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②민간경비원의 교육·지도·감독자의 역할과 전문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③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화된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2010년 이후 ‘민간경비 컨설팅’을 통한 총괄적인 보안컨설팅 교육체제와 자격제도,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민간경비 영역에 대한 구축을 실시해 오는 등 새로운 민간경비시장에 대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는 앞서 언급되었던 경비원에 대한 업무별 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실시하여 ①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이 부재하고, 경비원 교육에 대한 교육·지도·감독 체계는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을 담당하는 ②지도사에 대한 전문교육과 검정제도가 부족하며, 통합적인 전문화 자격체제로 인한 ③분야별 전문자격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는 업무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실습업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각 경비업무별로 특화된 전문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훈련 과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론과 시설경비실무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테러대응·화재대처·응급처치를 사고예방대책이라는 과목으로 통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립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 경비지도사 체계에서 나타나는 검정제도와 경비원 교육훈련 법·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경비원 자질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화된 자격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IV. 민간경비 교육훈련체계 정립방안

1.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신입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외에 관리자 교육, 서비스 향상 교육, 자질향상 교육, 실무 교육, 전문가 교육 등의 자체인 보수교육과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신입 공통 교육훈련은 경비원이 채용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경비 업무를 포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는데 그 내용들은 경비대상시설의 설립 배경에서 관리 목표 까지, 해당 경비업체에 대한 기본 지식, 시큐리티 리스크, 경비보안 시스템, 고객만족, 조직 강화, 체력 훈련 및 무도, 자기계발, 시큐리티 기본교육, 관련법령, 사건·사고, 위험물 및 위험인물 식별 등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이상철, 2004). 그리고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해당 업무의 실질적인 실무 중심 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보안의 접근방법의 프로그램 실무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원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안의 기본인 검문·검색, 순회·순찰, 출입관리 및 문형 탐지기, 엑스레이 판독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자 교육훈련은 리더로서의 대인관계 관리 역량을 높이고 민간경비 업무 성과를 기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관리자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안요원은 안전이라는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최고의 상품이라고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말미암아 민간보안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훈련이 많은 비중으로 요구되어 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서비스교육은 크게는 CS경영에서부터 서비스강사에 한 경력 개발 및 관리까지도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이상철, 2004). 이것을 토대로 신입교육 과목을 경비업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별로 특성

화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보안시스템은 PSA(Pedestrian Screening Areas) 및 VSA(Vehicle Screening Areas)가 기본이 되는데, X-ray 관독과 MD의 운영조차 이해를 못하고 직무에 임하고 있어 신입교육에 핸드스캐너 교육과 X-ray관독방법, MD의 운영방법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다.

1)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 교육훈련제도의 구성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이론교육(4시간), 실무교육(19시간), 입교식·평가 및 수료식(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교육에 대한 시간적 배분에 있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실무, 기계경비가 2시간씩 진행되고 있고,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 체포·호신술(질문검색 요령을 포함)이 3시간씩, 장비사용법이 2시간,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이 3시간으로 배분되어 있다.

<표 5> 일반경비원 신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립방안

| 구분 | 현행실시 | | 정립방안 | |
|--------------------|-----------------------------------|----|-----------------------------------|----|
|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이론 교육 (4시간) | 경비업법 | 2 | 경비업법 | 3 |
|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 | 2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 | 2 |
| 실무 교육 (19시간) |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을 포함) | 2 |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을 포함) | 3 |
| | 호송경비실무 | 2 | 호송 경비 운송에 대한 특수운전 방법 | 3 |
| | 신변보호실무 | 2 | 근접도보대형 및 우발상황 대응방법 | 3 |
| | 기계경비실무 | 2 | 감지장치·주장치 작동 방법 및 관제센터 임무 등 | 3 |
| |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 | 3 |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 | 3 |

| | 포함) | | 포함) | |
|----|---------------------------|----|-------------------------------------|----|
| | 체포·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 | 3 | 호신술 및 질문검색요령 | 3 |
| | 장비사용법 | 2 | 장비사용법(X-ray관독방법, 핸드스캐너, MD의 운영방법 등) | 6 |
| |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 | 3 |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 | 2 |
| 기타 | 입교식·평가수료식 | 1 | 입교식·평가수료식 | 1 |
| 계 | | 24 | | 32 |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려면 경비업법은 3시간,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은 2시간으로 이론교육을 5시간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실무, 기계경비를 3시간씩 진행하고,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 체포·호신술(질문검색 요령을 포함)은 기존대로 3시간씩, 장비사용법(X-ray관독방법, MD의 운영방법 등)을 6시간으로 늘려 기본적으로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사용방법에 2시간을 배당하고, 물리적 보안시스템인 출입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X-ray관독방법, MD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2시간을 배정하고, 나머지 2시간은 각 해당하는 분야의 경비원들을 편재해서 실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이 2시간으로 조정하여 실무교육시간을 26시간으로 늘려야 하며, 기타 입교식·평가·수료식은 1시간으로 배정하여 경비원 신입교육 시간을 32시간으로 늘림과 동시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특수 경비원 신입교육 교육훈련제도의 구성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이론교육(15시간), 실무교육(69시간), 입교식·평가 및 수료식(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교육에 대한 시간적 배분에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총기조작(3시간), 총검술(5시간), 사격(8시간)의 시간이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 하고 있으며, 특수경비원의 의무사항 중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분단국가이나 국가 중요시설에서 총기로 범인을 제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총기에 대한 교육훈련을 줄이고 시설경비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는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장비사용방법 8시간을 개정하는 프로그램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총기조작(3시간), 총검술 및 사격 (5시간), 장비사용법(X-ray판독방법, MD의 운영방법 등)을 (8시간)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표 6> 특수경비원 신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립방안

| 구분 | 현행실시 | | 정립방안 | |
|----------------------------|--|----|--|----|
|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이론 교육 (15 시간) |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 8 |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 8 |
|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4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법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4 |
| |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 3 |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 3 |
| 실무 교육 (69 시간) | 정신교육 | 2 | 정신교육 | 2 |
| | 테러 대응요령 | 4 | 테러 대응요령 | 4 |
| | 폭발물 처리요령 | 6 | 폭발물 처리요령 | 6 |
| | 화재대처법 | 3 | 화재대처법 | 3 |
| | 응급처치법 | 3 | 응급처치법 | 3 |
| | 분사기 사용법 | 3 | 분사기 사용법 | 3 |
| | 출입통제 요령 | 3 | 출입통제 요령 | 3 |
| | 예절교육 | 2 | 예절교육 | 2 |
| | 기계경비 실무 | 3 | 기계경비 실무 | 3 |
| |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 6 |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 6 |
| |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 4 |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 4 |
| |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 6 |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 6 |
| | 총기조작 | 3 | 총기조작 | 3 |
| | 총검술 | 5 | 총검술 및 사격 | 5 |
| | 사격 | 8 | 장비사용법(X-ray판독방법, | 8 |

| | | | | |
|----|-----------|----|--------------------|----|
| | | | 핸드스캐너, MD의 운영방법 등) | |
| | 체포·호신술 | 5 | 체포·호신술 | 5 |
| | 관찰·기록기법 | 3 | 관찰·기록기법 | 3 |
| 기타 | 입교식·평가수료식 | 4 | 입교식·평가수료식 | 4 |
| 계 | | 88 | | 88 |

2. 경비업체의 경비원 교육·지도·감독관리 체계 구축

현재 경비업체의 경비원 교육·지도·감독체계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의 책임으로, 경비업자는 전적으로 해당 업무를 경비지도사에 일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았을 때 현장지도와 직무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에서 교육을 계획·시행·관리하는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경비지도사의 경우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 소방학, 범죄학과 같은 이론과목에 대한 검정을 통해 합격자에 한하여 44시간의 경비지도사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경비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경비업무 중 시설경비, 신분보호, 기계경비, 호송경비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과목에 대한 교육과목과 시간이 일반경비원과 동일 과목으로 동일시간 교육을 받고 있어, 교육·관리·감독자로서 업무별 전문성과 교육감독을 특화하기 보다는 관련과목을 교육과목으로 편성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비지도사가 경비업체에서 경비원들을 지도할 경우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뿐더러, 경비업무 관련 교육계획 작성, 시행, 관리, 평가 등 교육·감독·관리자에 대한 자질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경비업무와 관련한 과목을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육자 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1회성 시험과 교육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환경과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와 적응, 교육방향 및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실효적이고 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보다 적은 교육과목, 낮은 교육시간을 받고 있는 경

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을 교육·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특수경비의 업무특성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 또한 이와 같은 교육·감독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를 활용한 경비원의 교육·지도·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 이후 교육이수 뿐만 아니라, 경비업무의 분류별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 작성, 시행, 평가, 개선사항에 대한 과목을 추가하고, 교육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비지도사가 현장에서 경비원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실습교육에 지도점검사항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원칙이나 요령, 사례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였을 때 경비지도사 교육과목의 개선을 <표 7>과 같이 개선하여 경비지도사의 현장점검 및 교육·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과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상 각 경비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민간경비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적인 도입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나, 추후에는 실습교육의 교육시간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각 경비업 분류 별 지도사(시설경비지도사, 호송경비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로 구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리·감독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경비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 구 분 | 과 목 | 시간 |
|----------------|-------------------|----|
| 공통교육 (28시간) | -경비업법 | 4 |
|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 3 |
| | -테러 대응 요령 | 3 |
| | -화재대처법 | 2 |
| | -응급처치법 | 3 |
| | -분사기사용법 | 2 |

| | | | |
|------------------|---------------------|---------------------|----|
| | | -교육기법 | 2 |
| | | -경비교육계획 작성/시행/관리/평가 | 6 |
| | | -예절 및 인권교육 | 2 |
| | | -체포·호신술 | 3 |
| | | -입교식·평가·수료식 | 4 |
| 실습교육 19 시간 | 일반 경비 지도 사 | -시설경비 | 2 |
| | | -호송경비 | 2 |
| | | -신변보호 | 2 |
| | | -특수경비 | 2 |
| | | -기계경비 개론 | 3 |
| | | -일반경비현장 실습/지도점검/평가 | 8 |
| | 기계 경비 지도 사 | -기계경비 운영 관리 | 4 |
| | |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4 |
| | | -인력경비개론 | 3 |
| | | -기계경비 현장실습/지도점검/평가 | 8 |
| 계 | | | 53 |

3. 현장중심의 직무교육 도입

우리나라의 경비원 교육훈련 중 직무교육 또한 제도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직무교육은 재직 중인 경비원에 대한 교육으로 경비원의 직무능력 및 업무향상을 위하여 일반경비원은 월 4시간 이상, 특수경비원의 경우 월 6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직무교육은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경비업자가 경비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비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목 및 필수과목을 제시하여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과목 지정에 도움을 주고 경비원 직무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표 8> 일반경비원 직무교육과목 개선방안

| 구분 | 교육 과목 | 교육 시간 |
|-------------|--------------------------------------|-------|
| 기본교육 | 경비업법 | 1시간 |
| |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 1시간 |
| 업무별 실무교육 | 시설경비실무 | 2시간 |
| | 호송경비실무 | |
| | 신변보호실무 | |
| | 기계경비실무 | |
| 계 | | 4시간 |

<표 9> 특수경비원 직무교육과목 개선방안

| 구분 | 교육 과목 | 교육 시간 |
|-------------|---------------------------------------|-------|
| 기본교육 | 경비업법 및 관련법(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헌법 및 형사법) | 2시간 |
| |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 1시간 |
| 업무별 실무교육 | 특수경비실무 | 3시간 |
| 계 | | 6시간 |

위 표 내용과 같이 직무교육에 대한 구분을 기본교육과 업무별 실무교육으로 나누어 업무별 효율적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교육은 신입교육 후 6개월이 경과될 시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련의 효과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편성하여 하루 동안 기본 및 업무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 경비원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6개월 마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경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교육을 경비지도사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경비지도사의 자질이 신입교육 강사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문제점이 남을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직무교육 또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모든 경비원에 대한 교육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비지도사의 주요 업무인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유지의 업무를 개선하여 교육에 대해서는 경비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수정하여 직무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4. 민간경비훈련체계 교육인프라 정립

2006년 경비업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비업자가 경비협회의 위탁을 받아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이 경비업자에 의한 자체교육 형태에서 경찰청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경비원의 자질향상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이 15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체계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전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장비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대부분 위탁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하다보니 교육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을뿐더러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내용에 대한 일관성 및 전문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제14조 제1항관련)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강사기준이 잘 나타나있지만 해당 내용도 2006년에 개정된 내용이므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최근 내용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

준을 두어 민간경비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0> 일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

| 구분 | 기준 |
|------|---|
| 시설기준 | <input type="checkbox"/> 5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input type="checkbox"/> 5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input type="checkbox"/> 호송차량 및 호송장비(호송경비실무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기계경비실무에 한함) |
| 강사기준 |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 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강사를 지정하는 데 있어 협회나 교육기관, 대학, 경찰 등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일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교육들을 실시함으로써 경비지도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장두헌 (2006). 무인항공기: 미래 항공 우주산업의 총아. 상상커뮤니케이션.
- 편석준, 최기영, 이정용 (2015). 왜 지금 드론인가. 서울: 미래의 창.
- 구희영, 손영각, 조민희 (2016).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3, 69-94.
- 김정일 (2017). 수리시설 안전관리에 있어서 드론을 이용한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상우 (2017). 드론을 이용한 2차 자동차 사고방지 시스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우 (2016).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건설현장 적용.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혜선 (2017). 국내 민간상업용 드론 생태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유진 (2016). 드론을 활용한 군 시설 및 방위력시설 유지 관리 적용 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 현 (2018). 사업용 드론의 운용과 안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순채 (2017).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이 융합된 드론의 보안규제 및 영상추적에 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광현 (2017). 무인기용 삼중대역 GPS 안테나 및 제어전용대역 무선통신 안테나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정식 (2016). 무인 드론의 군집비행을 위한 동적 리더 교체 기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준영 (2015). 드론을 활용한 방송 촬영 효과와 영향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홍한 (2015). 통합보안위협 분류기준 및 무인항공기 적용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ZHANG MENGZE (2016). 중국 드론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국외문헌

D. M. Marchick, M. J. Slaughter (2008). Global FDI Policy: Correcting a protectionist drif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0-11.

George W. Bush (2011). *Decision Points*. New York: Crown. 160.

Karl P. Sauvart (2009).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tectionism is on the Ris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052*: Research 52.

MORI (2004). IPSOS and th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CBI) in association with Qinetiq. Business Security Survey.

3. 기타자료

경향신문(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1037001, 2018년 4월 7일 검색).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2018년 4월 8일 검색).

EBS뉴스 G(<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296792/N>, 2018년 4월 23일 검색).

【Abstract】

Education and Training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 Korea

Choi, Seung Hee* · Lee, Jae Min**

In this paper,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efficient program for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analyze the problems of education programs implemented by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s by the current security industry law. The problem of establishing and the establishment plan were studied.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civilian security guards. As in the case of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specialization of curriculum programs classified by security sector should be studied and the professionalism should be strengthened by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distinguish current integrated security guard education.

Second, security guards' education, guidance and supervision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examination of the guard instructor, they also add subjects on the prepar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plan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ity and professionalism of each class. Should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actually train security guards in the field.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job - centered job education. Since mandatory courses are not designated for job education, it is difficult for security guards to conduct systematic and efficient job training for security guards, and sometimes they may not be properly implemen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ractical job training It is necessary.

* The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 director (The 1st Author)

**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Professor (The Corresponding Author)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r private security training system.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facilities standards and instructor standard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necessary for educating special security guards are clearly shown, as well as new education and job training for general guards, basic education for security guards, and job training for special guards Likewise, the infrastructure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with educational facilities and instructor standards so that education can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utilized as a method for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investment of education, and smooth cooperation of related institutions through establishment of such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Key Words: Private security, Education training, Private security education, Private security job training, Private security manager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위협 대응방안 연구

홍 태 현 · 이 세 환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위협 대응방안 연구

홍 태 현* · 이 세 환**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드론테러위협에 대한 국가중요시설의 대응방안 및 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연구, 논의하였다.

최근에 발생하는 국제적 드론테러는 드론에 총기, 폭발물 등을 장착하여 테러리스트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원격조작을 통하여 공격 목표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체계의 필요성과 대테러 전담인력의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및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법·제도적 방호, 경비체계와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 등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안전관리, 법·제도, 전담조직과 인력 및 장비 측면으로 구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 드론테러, 대테러

*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 석사과정(제1저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과 교수(교신저자)

| 목 차 |
|---|
| I. 서 론 II. 드론테러 정의와 동향 III.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위협 대응방안 문제점 IV. 개선방안 V. 결 론 |

I. 서 론

국내에서는 정부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17~‘26)」을 수립하였으며, 미래 유·무인기 통합 운영시대를 대비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15~‘21, 183억), 다수의 드론이 원격·자율 비행하는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K-드론시스템, ‘17~‘21, 253억) 등 미래형 드론과 정보획득·재난현장·해양정찰 등 「국민안전 감시용 드론」(‘17~‘20, 141억), 드론테러 등 대비 「Anti 드론기술」(‘17~‘18, 36억) 등 임무특화용 드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R&D를 추진 중으로,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진흥과 발전을 위해 초기시장과 개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그 이면에는 네트워크, 가상공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 해킹의 위협과 국지적으로 일어나던 분쟁과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글로벌 테러의 양상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의 총기, 차량, 폭발물 공격에서 생화학무기, EMP, 드론을 활용한 테러 등 신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공격은 공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유용한 공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단장체인 IS가 패색이 짙어지자 수도 ‘락카’ 포위전

에 참가한 미 특수부대에 무장 드론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드론에 살상력이 큰 40mm 수류탄 등 폭발물을 장착하여 폭파하는 등 미군은 방어 장비가 없어 작전에 방해를 받았으며, 락카 동부지역에 배치된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 반(反) IS 무장조직 근거지에 두 대의 드론을 투입,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 또한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17).

또한 지중해 연안의 시리아 내 호메이임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에 주둔한 러시아군은 공군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드론은 이슬람 테러집단이 수류탄 여러 개를 날개에 부착해 만든 값싼 드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포획한 드론의 자료를 해독한 결과 드론 발진 지점이 기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밝혀졌으며, 이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 15명이 사망하고 일부 전투기도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러시아군은 이 조잡한 드론 떼를 격추하기 위해 전과방해와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였는데(조선일보, 2018), 이처럼 드론에 총기, 폭발물 등을 장착하여 공격자 또는 테러리스트가 행위를 실행하는데 따르는 위험성을 낮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예멘 반군이 무인기를 이용하여 사우디 남부 국경지대의 공항과 석유시설을 타격하여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연합뉴스, 2018), 미군의 공격에 시리아군이 드론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간의 분쟁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은 드론을 활용하여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 등의 대테러 활동에도 사용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예방,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미국 국토안보부가 드론과 화학무기를 동원한 테러 위협에 경보를 발령하여 현행 경보에 잠재적 위협으로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드론 등록제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없으며, 물리적·전파적 방어체계의 표준도 없다시피한 상황이다(동아일보, 2017).

특히 각 정부부처, 기관 등 드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과 대응체계 모두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 비행금지구역(P73A)에 드론이 진입해 제재를 받은 사례가 2014년 12건에서 2017년 37

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7월까지 14건의 사건이 발생 하였다. P73A 공역에 진입한 드론은 2~3분이면 청와대에 도착할 수 있으나, 군 당국은 최근 3년간 드론 탐지 전용장비인 RF스캐너나 전용 레이더를 활용하지 않고, 육상 관측병들이 주간에는 육안으로 드론을 관측했거나 야간에는 TOD(열영상탐지기)로 탐지하는 등 관측 및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는 항공안전법을 통해 드론에 대한 안전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안전성인증 및 비행승인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한 무게 기준(25kg)을 적용 중이며, 연구·개발 중인 기체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시험비행허가를 통해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규제완화(‘16. 7.)를 통해 장기비행승인제를 도입하여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최대 6개월 간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 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고,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로써 드론에 대한 규제를 부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제한적 허용에 대하여 드론테러에 대한 안전과 위협평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테러, 경호, 경비, 경찰, 소방, 안보, 군사 분야 등 안전과 관련된 학문적 분야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연구되거나 논의된 부분이 없어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서 드론 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드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하는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의 측면에서 드론에 대한 법, 제도,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연구,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드론 관련 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각 위협유형에 대한 국내외 법과 제도를 비교하여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중요시설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I. 드론테러 정의와 동향

1. 드론테러의 정의

드론과 테러의 정의의 범위 안에서 드론테러를 정의하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 항공기, 선박, 시설 등의 공격, 방해, 파괴, 조작, 폭파, 운반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드론테러”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2. 드론테러의 동향

IS(이슬람국가)가 드론을 직접적인 공격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하늘을 나는 폭탄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2016년 10월 2일 IS가 띄운 드론폭탄이 터지면서 이라크에서 2명이 죽고 2명이 다쳤으며, 뉴욕타임스 펜타곤은 드론테러를 사용한 새로운 테러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뉴시스 2016).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서 연설을 하던 중 드론폭탄 공격으로 인한 암살위험을 받았으며, 폭발로 현장에 있던 군인 7명이 다치고 이들 중 3명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드론 1대를 격추하고 나머지 드론은 인근 건물에 충돌 뒤 폭발했으며, 조사결과 드론은 각각 1kg 폭발물을 싣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쿠키뉴스, 2018).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앞선 사례 등 현재 드론은 테러세력들 사이에서 유용한 ‘비대칭 무기’로 꼽히며 IS등 테러리스트 및 과격단체들이 수류탄

투하나 사회 기반 시설 침투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실제 IS는 2016년 10월 중동 지역에서 자폭용 드론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2명을 살해했다.

특히 테러리스트가 사용한 드론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을 사용한 첫 사례로, 드론을 사용한 테러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주에 들어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 예로 2015년 1월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 통제력 잃은 드론이 추락하였고, 같은 해 4월 일본에서는 정부의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한 남성이 총리 관저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담은 소형 드론을 날려 보내는 사건 등(매일경제, 2015), 다양한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리우 올림픽 개막식 때는 정체불명의 드론 3대가 주 경기장 상공에 출현해 고조되었던 테러 위기를 더욱 상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시장에 공급된 상업용·개인용 드론은 2014년 50만대였던 것이 2017년 300만대로 불과 3년 사이에 6배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통계는 그만큼 상업용 드론에 의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테러위협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WSJ(월스트리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드론 공격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시설과 발전소에 대한 드론 영공 출입 금지를 선언했고, 이에 맞춰 미국 의회도 양당 의원들이 지난 5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드론으로부터 건물과 기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다. 드론 제조사들도 각국 정부가 정한 ‘비행 금지구역’에 드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법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KBS뉴스, 2018).

영국의 일간 익스프레스 주말판 선데이익스프레스는 “드론테러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도했다. 수백억을 들여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중요시설이 100만원 상당의 드론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연합뉴스, 2016), 벨기에의 네덜란드어 신문인 ‘드 모르겐(De Morgen)’은 테러리스트들이 폭발물을 설치한 드론을 이용해 테러 공격을 저지르는 것을 매우 우려했고, 드론에 폭발물을 실어 테러 공격에 나설 경우 검문검색을 피할 수 있는 등 목표물에 쉽게 접근해 사전 차단이 어렵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자살폭탄테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IS는 드론으로 폭발물을 이동시켜 목표물을 공급하는 홍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자신들의 드론 활용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7).

하지만 특정 건물이나 지점에 대한 접근 제한만으로 드론의 잠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건물, 모든 지역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아직까지 실질적인 드론테러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드론관련 규제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 시행과 함께 상업용 드론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와대 인근 및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인근의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이 비행하는 등 드론테러의 위협요소가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다.

III.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위협 대응방안 문제점

1. 드론 안전관리 정책의 미흡

항공안전법 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보면 드론은 용도에 따라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각 25kg 초과, 12 ~ 25kg, 12kg 이하로 구분하여 장치신고, 사업등록, 기체검사, 보험등록, 비행승인, 준수사항, 조종자격, 장치말소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사업용 경우 장치신고, 사업등록, 기체검사, 보험등록, 조종자격, 장치말소의 신고의 의무가 없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테러나, 사고에 따른 추적이 불가능하다.

2018년 4월 서울 신설동에서 장치신고의 부재로 드론이 추락하여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선루프와 차량의 도어를 파손시킨 사건이 있었으나 드론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보상의 어려움과 신설동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비행을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일간투데이, 2018). 1kg 무게의 드론이 150m 상공에서 추락할 경우 2t의 충격을 줄 수 있어 안전위해요소가 높다(베이비 타임즈, 2018). 미국에서는 드론을 피하려던 헬리콥터가 나무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FAA (미국 연방 항공국)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이 또한 드론의 조종사는 찾지 못한 상황이다(ZDNet Korea, 2018).

또한 드론은 단순한 기계학적 구조로 제작이 쉽고, 드론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모터, 프로펠러, 소형카메라, 영상 송·수신기, 배터리, 조종기, VR고글 등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하고 몇 가지 공구만 있다면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하여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다.

따라서 테러리스트가 불순한 의도로 드론을 제작한다면 기체부품 및 조종기 등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관리 제도의 미흡으로 드론테러를 야기할 수 있다.

2.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위협 대응 관련 법·제도적 체계의 미비

앞서 비교 분석된 내용 중 법적, 제도적인 문제에서 나타난 특징은 국회를 제외하고는 “테러”라는 함에 있어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매우 포괄적 예방·대응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예방·대응 권한은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나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공격을 받는 대상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드론테러 또한 포괄적 범주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중요시설에서 갖추고 있으나, 테러방지법 안에서는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테러대상시설 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각 국가중요시설 담당자마다 상이한 대테러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이는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에서도 새로운 위협을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있으나, 테러에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대테러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가 미비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각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테러 예방·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임무로 명시하기 보다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금지조항과 같은 포괄적 정의로 명시하고 있어 테러사건 발생 시 이를 담당하는 보안담당자의 책임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통합방위법상 나타나 있는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및 보안담당자의 범위가 테러방지법 상에서도 통합방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국가중요시설 보안담당자인지 그 주체가 불분명하다. 단일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인 경우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기획과 경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통합방위법상 비상사태의 정의에 대한 범주가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테러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 운영되는 보안 조직 및 부서가 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조직 내 어떤 부서가 테러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임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

3. 드론테러 대응관련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인력의 부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통합적으로 드론테러에 대한 절차와 예방·대응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군과 국회(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를 제외하고는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며, 테러방지법에서 또한 국가중요시설을 테러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국가중요시설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테러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대테러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기준 또한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중요시설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 등에 따른 교육과 예방·대응시스템의 수준과 새로운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마다 각각의 조직구성이 상이하며, 일부는 내·외곽의 상황실과 지휘·통제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중요시설의 상황접수·전파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상황실 간 연락망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인력운용 및 CCTV와 같은 감시장비를 통해 실제 사건의 접수·판단·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문제와 효과적인 임무분담, 대응, 지휘·통제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지휘·통제 체계의 혼란은 사건 초기에 가장 중요한 초동조치와 피해확산 방지 및 고착, 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대응주체의 개별법에 따른 중복된 임무수행으로 인해 책임전가와 관전자적 입장을 고수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드론테러의 사례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드론테러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에 조직을 개편하고, 대테러 장비의 도입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양성하는 국가중요시설을 전무하다.

기존의 체계에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다보니, 즉각적인 조직의 개편이 매우 어렵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도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중요시설 보안관리자의 경우 이를 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테러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겠으나, 대테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개편 및 확장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등한시 할 경우 오히려 조직의 개편 및 확장의 비용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드론 탐지·식별·대응 장비확보 미흡

드론테러는 기존의 테러수단과는 다르게 외국, 내곽, 내부를 개의치 않고 높이와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외곽 울타리로부터 외곽 출입문, 시설의 근거리까지 빠른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테러의 수단으로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프레테터 드론을 활용한 경찰·공격작전을 실행하고 있으며(연합뉴스, 2015), 이슬람국가(IS)는 2016년 10월 이라크에서 처음으로 드론테러를 자행하였다(한국경제, 2018). 2018년 1월 시리아에 있던 러시아 군이 폭발물을 실은 드론으로 공격을 받았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사건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을 활용한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와 같은 장점을 활용한 드론테러가 발생하였다(이테일리, 2018).

일반적으로 드론을 막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전자적인 방법이 있다. 물리적인 방법은 총알이나 그물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시키는 것이고, 전자적인 방법은 방해전파를 이용해 드론을 조종하는 전파나 GPS 신호를 교란시켜 드론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소총과 전자파 교란 장치를 사용하고, 네덜란드의 경우 독수리를 훈련시켜 강한 발톱으로 드론을 낚아채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은 그물을 탑재한 드론을 투입해 그물을 던져 잡는 방식을 활용하는 등 국가별로 다양한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물 방법은 사거리가 매우 짧고, 50m 이상의 고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드론을 총으로 격추하는 것이 어려우며, 전파 교란방법은 통제 불능이 된 드론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추락할 수 있어 그 나름대로의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보안뉴스, 2018).

외부의 물리적인 침입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방호체계 하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는 울타리와 외곽 감지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테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발생한 풍등으로 인한 저유소 화재사건 또한 외부의 울타리가 침입 및 방벽효과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볼 때(한겨레, 2018) 기존의 방호체계로써 의도를 가지고 공격목표를 향해 드론테러를 실시할 경우 외곽 울타리나 감지시스템, CCTV 및 육안감시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응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의 감시를 위한 CCTV의 활용 초소, 인력의 순찰이 대부분 특정 장소나 건물 외곽, 지상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게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이러한 방호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고도와 위치를 활용하여 침입하는 드론테러에 대한 대응시간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드론테러의 다른 특징으로 테러리스트가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무기, 폭발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현장에 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것 또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드론을 탐지·식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이 미흡하다는 것은 드론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V. 개선방안

1. 드론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

<표 11> 국가별 드론 규제수준 비교

| 구분 | 한국 | 미국 | 중국 | 일본 |
|---------------|---|--|-----------------------------|--|
| 고도제한 | 150m 이하 | 120m 이하 | 120m 이하 | 150m 이하 |
| 구역제한 | 서울 일부(9.3km), 공항(9.3km), 원전(19km), 휴전선 일대 | 워싱턴 주변(24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5.6km), 경기장(반경 5.6km) | 베이징 일대, 공항 주변, 원전주변 등 | 도쿄 전역(인구 4천명/km ² 이상 지역), 공항(반경 9km), 원전주변 등 |
| 속도제한 | 제한 없음 | 161km/h 이하 | 100km/h 이하 | 제한 없음 |
| 비가시권, 야간비행 | 원칙불허 예외적용 | 원칙불허 예외허용 | 원칙불허 예외허용 | 원칙불허 예외허용 |
| 군중 위 비행 | 원칙불허 예외허용 | 원칙불허 예외허용 | 원칙불허 예외허용 | 원칙불허 예외허용 |
| 기체 신고·등록 | 사업용 또는 12kg 초과 | 사업용 또는 250g 초과 | 250g 초과 | 비행허가시 관련증빙 제출 |
| 조종자격 | 12kg 초과 사업용 | 사업용 | 7kg 초과 | 비행허가시 관련증빙 제출 |
| 사업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출처 : 국토교통부(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2017~2026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항공안전법 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을 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도제한은 150m로 다소 높고, 구역제한은 일부 상이하나 서울은 일부의 9.3km, 미국 워싱턴은 주변의 24km, 중국 베이징은 일대가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은 도쿄 전역이 제한되어 있다. 속도제한은 미국과 중국이 161km/h와 100km/h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제한이 없다. 기체의 신고·등록 경우 미국과 중국은 사업용이거나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신고·등록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용 또는 12kg를 초과 해야지만 신고·등록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각국의 드론 규제들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좁은 지역에 각종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분포해 있고 인구 과밀화 지역에 드론테러가 발생한다면 적지 않은 피해를 우려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문제들의 해결과 개선을 위하여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작년부터 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데일리, 2018). 기존 사업용과 비사업용, 무게로 이루어진 단순한 분류를 4단계로 세분화하여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드론 분류 기준을 개선했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으로 250g 이하의 기체에 장비를 탑재하지 않으며 최대 비행고도 20m, 비행거리는 50m, 사람 위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자격증과 기체신고는 불필요 하지만 공항주변 3km 내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 무게와 운동에너지 1,400J 이하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소유자 등록과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와 운동에너지 250g ~ 7kg, 1,400J / 7kg ~ 25kg, 14,000J에 해당하는 기체로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하며,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소유자는 기체형식과 중량, 용도를 신고 하여야한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150kg 이하의 기체로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분류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필요하고, 기체의 안전성 인증, 소유자의 기체형식, 중량, 용도 신고 및 비행 전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표 12> 드론 무게기준 현행-개선안 비교

| 구분 | 현행 | | 개선(안) | |
|-------------|------------------|--|------------------|--|
| 기체 신고·말소 | 비사업용 | 12kg 초과시 신고 | 사업용· 비사업용 | 250g 이하 신고불필요 |
| |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 250g ~ 7kg 소유주 등록 1,400J / 7kg 초과시 신고 |
| 비행승인 | 25kg 이하 | 관제권(9.3km),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필요 | 250g 이하 | 공항주변(3km) 에서 비행승인 필요 |
| | | | 250g~25kg | 관제권(9.3km),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필요 |
| | 25kg 초과 | 비행승인 필요 | 25kg 초과 | 비행승인 필요 |
| | 150m 고도 초과 비행 | 비행승인 필요 | 150m 고도 초과 비행 | 비행승인 필요 |
| 안전성 인증 | 25kg 초과 안전성 인증 | | 25kg 초과 안전성 인증 | |
| 조종 자격 | 비사업용 | 불필요 | 사업용· 비사업용 | 250g 이하 자격 불필요 |
| | 사업용 | 12kg 초과시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 (필기+실기) | | 250g~7kg 온라인 교육 7kg~25kg 필기+비행경력 25kg~150kg 필기+실기 |

출처 : 국토교통부(2018), 2018. 10. 1.(월) 보도자료

이렇게 현행보다 개선안은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나누어 무게, 고도, 운동 에너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비행승인, 소유자 등록 등 세분화하여 취미용 장난감 드론은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용 드론은 규제와 개선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선안이 통과되고 정착이 된다면 드론 안전관리 제도 면에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대응조직 및 관리자 지정

먼저 법·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해당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조직 내 어떤 부서가 테러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임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통합방위법 상 국가보안시설 관리자(보안담당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항은 없고, 테러방지법 상에서도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을 제외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 12조2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의 범위에 테러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시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의 주체가 전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원화된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에서 테러 대상시설의 대테러활동의 주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기관의 조직구성이나 권한, 훈련, 교육 등을 법적 근거 아래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제도적 근거의 마련 이후 드론테러하고 하는 새로운 수단의 테러활동을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드론테러라 함은 기존의 2차원적인 방호개념에서 대응할 수 없는 공격수단으로써 3차원적 방호개념이라는 새로운 개념 하에서 예방·대응 대책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대테러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산하에서 “테러예방·대응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적 대테러활동 기준의 큰 틀 안에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 기관의 분야, 지역, 장소적 특성에 따라 기관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내의 보안조직이 대테러 활동의 초기대응과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항공안전법 상 비사업용 12kg이하 드론의 등록, 신고 사항이 없어 드론의 비행 이후에 대한 사후적 조치만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드론이 테러에 활용될 경우 예방적 측면에서는 드론테러의 방어가 불가능하며, 대응적인 측면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형법에 따라 현행범에 대한, 또는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테러방지법 상 국가중요시설의 보안담당자에게는 테러대응 권한이 없으므로, 드론테러가 발생할 경우 대테러 활동을 실시하는 관계기관의 대응과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러대응의 단계를 구분하여 낮은 단계의 테러사건의 경우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 자체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대응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드론테러 관련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드론테러는 기존의 방호체계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측면의 위협이며, 최근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체계에 있어 전담조직의 개편 또는 신설함으로써 대테러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하여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출입구 또는 외곽 울타리를 통한 침입, 시설 내·외부의 공격에 대해 특수경비원이나 청원경찰과 같은 민간경비원과 국가중요시설과 인원의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드론테러와 같은 3차원적인 침입, 공격수단과 같은 기술적 공격에 대한 장비와 이를 운용할 인력을 보유한 조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앞서 제기된 문제였던 테러방지법 상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에게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해야한다는 조항과 같이 인력과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과거의 낮은 조직체계의 개편하거나 신설을 통해 새로운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조직적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드론테러의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드론을 탐지,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하며, 대응인원의 경우 포획장비 및 대응장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4. 드론탐지·식별·대응 장비 도입

드론테러의 예방 및 대응절차는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 활동-인지-경보전파-대응의 상황대응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상황인지부터 대응까지의 활동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육안, 영상, 신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위협과는 다르게 상황인지부터 대응시간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특징과, 충격을 사용한 격추, 그물을 활용한 포획 등의 방법이 효과적으로 드론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주파수를 이용한 드론의 탐지를 실시하는 장비의 도입을 통해 상황인지-대응시간을 확보하는 탐지자산 확보와 드론제압을 위한 GPS 교란 또는 통제탈취와 같은 기술적 장비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드론테러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탐지할 수 있는 탐지자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드론테러의 대테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공역에 대한 대응의 개념보다는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에서는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및 식별-경보전파 및 사격통제-추적 및 타격의 3단계로 방공작전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무기체계에 레이더 혼합적으로 운용하여 자체탐지-추적 및 타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드론 또한 항공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드론테러에 대한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탐지-추적 및 타격, 통제권탈취와 같은 절차로 대응의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테러센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을 위해 대테러 조직·체계구축,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통신관리, 대테러활동, 교육·훈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국가중요시설과 드론테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드론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최근 국제적인 테러발생의 환경과 더불어 러시아군 공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 IS의 무장 드론 공격, 예멘 반군의 무인기를 사용한 공항과 석유시설 타격, 드론을 사용하여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 기도 등 드론을 활용한 테러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드론공격은 드론에 총기, 폭발물 등을 장착하여 원격조작을 통해 테러리스트가 안전한 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격목표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기 매우 용이한 수단으로써 최근 그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드론 공격에 대한 위협을 국가중요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연구, 논의하였다.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법, 규제, 특정 국가중요 시설에 대한 법·제도적 방호, 경비체계와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 등 법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안전관리, 법·제도적,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각종 장비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안전관리 측면으로 항공안전법 122조를 외국의 규제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규제는 외국의 규제들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약한 규제로는 관리면에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에서 보다 쉬운 드론테러를 야기할 수 있다.

법·제도적 측면으로는 국가중요시설의 테러예방, 대응을 위한 전담 대테러조직에 대한 임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고, 새로운 테러위협으로 등장한 드론테러에 대한 대테러활동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있었다.

전담조직 측면에서는 각 국가중요시설에서 대테러활동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호체계에서 추가적인 대테러 담당 인원의 확충이나 조직적 변화가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탐지·식별·대응 각종 장비의 문제점으로는 드론테러의 특성 상 대응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탐지자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일부 국가중요 시설을 제외

하고는 아직까지 안티드론 장비 확보 상태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규제 경우 사용자 등록, 각종 제한 등 항공안전법 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의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제도적 「통방방위법」, 「방호훈련」, 「테러방지법」 등 근거 하에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대테러 담당조직을 명확히 하고, 대테러센터에서 새로운 테러위협에 대한 대테러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해당 조직이 원활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대테러전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직적 확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탐지·식별·대응 각종 장비는 탐지 및 식별·경보전파·추적 및 타격, 통제권탈취 등의 대테러 활동을 위해 기술적 예방,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대응시간 확보 이후 임무분담을 통한 경보전파와 장비사용, 인원 배치 등 세부적 활동에 대한 업무분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테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체적인 대테러 활동과 더불어 경찰, 군 및 대테러 전담조직과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테러공격에 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테러 전문가 양성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테러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담당관이 충분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철영 (2016). 미래전에 대비한 드론의 군사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현 (2015).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홍익법학, 16(2): 79-104.
- 손유진 (2016). 드론을 활용한 군시설 및 방위력시설 유지관리 적용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주 (2016). 경찰 드론의 활용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1호.
- 이준우 (2017). 토공사 단계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 및 발전방향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국토교통부 (2017).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2017~2026. 관계부처 합동.
- 국토교통부 (2018).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첨단 항공과.
- Clarke, Roger (2014). Understanding the drone epidemic.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0 : 230-246.
- 보안뉴스. [이만중의 테러라이브-18] ‘드론 이용한 벌떼테러’ 저지할 수 있을까, 18.5.23.
- 국방일보. [육군방공학교] 무인가·드론 등 대응 방안 모색 국방일보 2017.12.17.
- 뉴스 1. [文 정부1년] 4차혁명 핵심 “드론” 갈 길 멀다... “규제문턱” 낮춰야, 2018.5.7.
- 연합뉴스. 예멘 반군 "사우디 공항, 아랍코 시설 드론 공격"(종합), 2018.4.11.
- 연합뉴스. 시리아내 러시아 기지 '드론' 공격 두고 미-러 공방, 2018.1.9.
- 연합뉴스. 미국토안보부, 드론 공격 동원한 테러위협 경고, 2017.11.11.
- 연합뉴스. IS, 패색 짙어지자 미군에 드론 공격 집중, 2017.6.15.
- 이데일리.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6명 체포..."중드론 사용", 2018.8.6.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드론 폭탄, 2018.8.7.
- 연합뉴스. "미국 테러위협 줄이려면 중동서 드론 공격 중단해야", 2015.12.11.
- 한겨레. 국가 중요시설이 겨우 풍등에 폭발? 원인은 “방재 부실”, 2018.10.19.
- 동아일보. 급증하는 드론 범죄, 대책이 필요하다 2017.9.26.
- 조선일보. 시리아 내전 흔드는 값싼 드론·로켓... 첨단 무기도 '썰썰', 2018.2.13.
- 뉴시스. IS가 띄운 '드론 폭탄'...대테러전의 새 위협으로 급부상,

- 2016.10.12.
 쿠키뉴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드론 암살 위협...테러범 6명 체포,
 2018.8.6.
 KBS뉴스. [글로벌 돋보기] '두 얼굴의 드론이 다가온다'...테러 공포
 확산, 2018.8.9.
 연합뉴스. 벨기에 "드론 테러위협 심각하게 간주"...드론테러 대비책
 강구, 2017.4.12.
 연합뉴스a. 청와대 상공 드론 무단진입 작년 37건..."테러에 무방비", 2016.9.25.
 매일경제. '드론 관저 침입'에 깜짝 놀란 아베, 등록제 서두른다,
 2015.4.24.
 아시아경제. 정부, 드론규제 완화...완구·레저용 접근성 높여,
 2018.10.1.
 이데일리. 드론 4단계 분류... 완구용은 규제 완화·고성능은 안전성 강화,
 2018.10.1.
 조선비즈. 완구용 드론 누구나 날릴 수 있다... 드론 '12kg 초과' 단일 기준
 세분화, 2018.10.1.
 ZDNet Korea. 美, 드론 피하러더 헬리콥터 추락 '공방', 2018.2.19.
 일간투데이. 서울 신설동에서 차 위로 드론 추락...차량파손 '심각'
 2018.5.11.
 베이스타임즈. [드론세상 기고] '동대문 드론 추락사고' 유감,
 2018.7.19.
 국방부훈령 제1057호.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국회사무처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경비업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 타법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7.26., 타법개정]
 청원경찰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 타법개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7.26., 타법개정]
 통합방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항공안전법 [시행 2018.1.1.] [법률 제14939호, 2017.10.24., 타법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8.4.25.] [국토교통부령 제509호, 2018.4.25.,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10.] [국토교통부령 제464호, 2017.11.10., 일부개정]

- 국회법[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 국회사무처 직제[시행 2017.10.11.] [국회규칙 제204호, 2017.10.11.,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시행 2014. 4. 6.] [법률 제12257호, 2014. 1. 14., 일부개정]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시행 2017. 11. 3.] [국토교통부령 제461호, 2017. 11. 3.,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5호, 2018. 4. 17., 일부개정]
- 법원조직법[시행 2018. 7. 1.] [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일부개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4. 12. 30.] [대법원규칙 제2579호, 2014. 12. 30., 타법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03호, 2018. 4. 17., 일부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해양수산부령 제306호, 2018. 10. 17., 일부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6. 3. 2.] [국방부령 제884호, 2016. 2. 29., 일부개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타법개정]

【Abstract】

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terror threa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Hong, Tae Hyeon*·Lee, Se Hwan**

In this study, we have discussed and discussed the countermeasures and the system construction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gainst the new threat of drone terror.

Recently, international drone terrorism has been equipped with guns and explosives in the drone, and terrorists are being used as a means of achieving performance against attack targets through remote operation in low cost safe environment.

As the threat becomes reality,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a counter-terrorism system capable of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such threats, as well as expanding counter-terrorism personnel, cultivating professional personnel, and countermeasures.

It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laws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national security systems, anti-terrorism law, and integrated defense law for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nd compares problems to safety management, law and system, dedicated organization, personnel and equipment, Respectively.

Key Words: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Drone, Terrorism, Drone-Terror,
Counter Terrorism

* YongIn University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Course of Master (The 1st Author)

**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Security Professor (The Corresponding Author)

부 록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118
- 논문집필요령 124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39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145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163
- 논문투고 일정 16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투고·심사 및 발행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적 및 주관】

- ①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 【원고모집】

- 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영문으로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하고 원고모집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 ②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학회홈페이지나 학회지 등의 적정한 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공지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제3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 ①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회칙상의 연구범위로 규정된 “1.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 분야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테러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자격 및 접수】

-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복수의 투고자일 경우 투고자 모두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② 논문 투고 시 단독저자 1편, 공동저자 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가 제한되며,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③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며 논문 투고 후 심사료를 납부한 날로 한다. 접수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된다.
- ④ 온라인으로 논문 원본 파일을 논문게재신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접수한다.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원고는 본 학회 “논문집필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위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단, 이 경우 반환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날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
- ⑥ 긴급논문투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5조 【학회지 발행일】

- ① 학회지의 발행은 연2회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7조 【인쇄와 발송】

위원장은 편집방향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발송 절차를 밟는다.

제8조 【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 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2. 게재예정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제00호(2000년 0월 00일 발행예정)
3. 세부심사결과(해당란에 0표하고 점수란에 점수 기재)

| 평가기준 | 등급기준 | 매우 미흡 | 다소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점수 |
|----------------------|------|----------|----------|--------|-------|----------|----|
| | 점수 | 0 ~ 4 | 5 ~ 8 | 9 ~ 12 | 13~16 | 17~20 | |
| ①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 | | | | | | |
| ② 연구 방법의 적절성 | | | | | | | |
| ③ 내용 전개의 논리성 | | | | | | | |
| ④ 연구 내용의 독창성 | | | | | | | |
| ⑤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 | | | | | | |
| 총점 [/100] 점 | | | | | | | |

※ 각 평가기준별 ‘다소 미흡’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

4. 종합판정(총점을 근거하여 판정)

| 구분 (점수) | 게재 확정 (91-100) | 수정후 게재 (81-90) | 수정후 재심사 (71-80) | 게재불가 (0 ~ 70) |
|-------------|-------------------|-------------------|--------------------|------------------|
| 해당란에 0표시 | | | | |

5. 심사위원 인적 사항

- 소속/직위:
- 성명:
-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 / 예금주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귀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 | | | | | | | | |
|-------------------|----------|--|-----------|--|------------|--|----------|--|
| 논문제목 | | | | | | | | |
| 심사결과 | 게재 확정 | | 수정후 게재 | | 수정후 재심사 | | 게재 불가 | |
|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 | | | | | | | |

[별첨 2]

학회지 발간 절차 및 처리기간

(※ 총 처리 누적기간: 70일 이내)

| 절 차 | 처리기간 | 누적처리기간 |
|---------|----------|---------------|
| 원고심사배정 |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 ↓ | | |
| 심 사 의 회 | 송부기간 5일 | 접수마감 후 14일 이내 |
| ↓ | | |
| 심 사 | 심사기간 2주일 | |
| ↓ | | |
| 심사결과접수 | 회송기간 5일 |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
| ↓ | | |
| 게재여부결정 | 3일 | 접수마감 후 33일 이내 |
| ↓ | | |
| 1차수정지시 | 7일 | 접수마감 후 40일 이내 |
| ↓ | | |
| 수정원고접수 | 7일 | 접수마감 후 55일 이내 |
| ↓ | | |
| 2차수정지시 | 3일 | 접수마감 후 60일 이내 |
| ↓ | | |
| 수정원고접수 | 3일 | 접수마감 후 67일 이내 |

※ 2차 수정지시가 없는 경우 바로 발간절차 진행

논문집필요령

I. 논문형식

1. 논문의 틀

-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 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영문), 저자이름(국문·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여 첨부한다.
- 3) 원고 작성은 한글프로그램(1997버전 이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편집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원고의 작성은 A4 용지를 사용하며, 폭: 184mm, 길이: 265mm, 용지 방향: 좁게, 제책: 한쪽(1)으로 한다.
 - (2) 여백의 크기는 위: 35.0mm, 아래: 20.0mm, 왼쪽: 33.5mm, 오른쪽: 33.5mm, 머리말: 15.0mm, 꼬리말: 13.0mm, 제본: 0.0mm로 한다.
- 4) 국문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로 하며, 영문 원고는 국문 원고에 준한다.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25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원고의 편집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아래 논문의 요소별 편집에 따른다.

2. 논문의 요소별 편집

1) 논문의 제목

- (1) 글자체는 진한 고딕체(15.0pt)로 지면 가운데 작성한다.
- (2) 논문제목의 부제를 달 경우에는 앞의 글자에 콜론을 붙여서 쓰되, 뒷 글자와는 한 칸을 띄우고 사용한다.

2) 저자명과 소속

- (1) 저자명은 제목 아래 고딕체(11.0pt)로 기술하며 지면의 오른쪽에 위

치시킨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이름간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 (2) 저자명 뒤에는 ‘*’ 표시를 하여 동일한 지면 하단에 저자의 소속의 각주 형태(신명조체, 9.0pt)로 제시한다. 저자가 복수인 경우 저자의 순서대로 ‘*’ 표시(두 번째 저자명 뒤 ‘**’ 표시, 세 번째 저자명 뒤 ‘***’ 표시)를 한다.

- (3) 저자가 복수인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순).

3) 요약 및 주제어

- (1) 저자명에서 한 줄 간격을 두고 ‘국문초록’이라는 제목을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작성하여 괄호([]) 안에 위치시킨다.
- (2) 요약의 내용은 논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신명조체(10.0pt)로 150단어(600자) 안팎의 길이로 작성한다.
- (3) 국문초록의 첫머리에는 들여쓰기를 한다.
- (4) 주제어는 고딕체(10.0pt)로 요약내용과 한 줄 간격을 띄워 작성한다.
- (5) 국·영문 요약 주제어(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4) 목차

- (1) 목차는 저자명 아래 위치시키며, 도표를 작성하여 기술한다.
- (2) ‘목 차’라는 제목을 가운데 고딕체(11.0pt)로 작성한다.
- (3) 목차의 내용은 로마 목차만을 신명조체(10.0pt)로 기술하며 들여쓰기를 한다.

5) 본문

-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고딕체, 14.0pt), 1(고딕체, 12.0pt), 1)(고딕체, 11.0pt), (1)(고딕체, 11.0pt), ①(고딕체, 11.0pt), 가)(고딕체, 11.0pt)의 순서를 따른다.
- (2) 본문의 내용은 신명조체(10.0pt)로 작성하며 초록의 주요어로부터 페이지를 넘겨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을 제시할 때는 ‘참 고 문 헌’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고딕체(14.0pt)로 제시하고 참고문헌 내용을 기술한다.

7) 영문 요약과 주제어

- (1) 참고문헌을 제시한 뒤에는 영문으로 ‘ABSTRACT’이라는 제목을 문단 가운데 신명조체(13.0pt)로 제시하고 영문 제목(휴먼명조체, 13pt, 진하게), 저자명(고딕체, 10.0pt), 영문 요약 내용(신명조체, 10.0pt), 주제어(고딕체, 10.0pt)의 순으로 기술한다.
 - (2) 작성 요령은 국문 초록의 작성 요령과 같다.
- 8)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9) 논문의 요소별 편집과 관련된 자세한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논문 양식’을 참고한다.

II.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1. 일반 문헌의 경우

1) 단독 저자의 연구가 하나만 인용되었을 경우

- 국내 문헌의 경우 성명과 출판연도를 본문 내에 기입한다.

예) 홍길동(2014)은 국가안보란...

- 외국 이름의 경우 동양 저자의 경우에는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고, 서양 저자는 영어로 성만 표기하고 동양 저자의 이름이라도 영문으로 표기된 연구를 인용했을 때는 저자의 성만 표기한다.

예) 모리야마 타다시(守山 正, 2012)은...

Moriyama(1999)는...

(1) 인용문헌을 괄호 안에 표기하기

-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문장 끝에 성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

예)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2013).

...이기 때문이다(Samuel, 2013).

(2) 문헌의 부분 인용

- 저자명을 본문 중에 언급하지 않고 저자의 특정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한 특정 자료와 출판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 출판연도 뒤에 자료를 제시한다.

예) ...을 밝혀냈다(홍길동, 김길동, 2010: 표 1 참조).

...을 밝혀냈다(Adams, Smith, & Harrison, 1999: 표 1 참조).

(3) 본문 중에 저자명과 출판연도가 모두 쓰였을 경우

예) 1970년 Bruden은...

(4) 한 단락에서 같은 연구가 반복된 인용된 경우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같은 참고 문헌의 출판연도는 반복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예) Sigmund(2009)은 ...라고 주장했다. 또한 Sigmund은 ...라고 하였다.

2) 여러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인용하였을 경우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

-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두 저자명을 모두 제시
- 본문 중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고 문장 끝 괄호 안으로 처리했을 때 한국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를 사용한다.

예) 홍길동과 김길동(2011)는...

Steven와 Trueman(1998)는...

...라고 주장하였다(홍길동, 김길동, 2011; Steven & Trueman, 1995).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수행한 연구

- 처음 인용할 때는 모든 연구자의 성명을 표시하되, 각 이름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열거되는 저자명 앞에 ‘&’를 삽입한다.
-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만 적고 공동 저자명은 생략하고 “등” 혹은 “외”로 표시한다.

예) [첫 인용]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김길동, 홍길동, 이길동, 2005)...

Stevens, Green, Taylor와 Guanberg(2010) 등은...

예) [같은 연구일 경우, 두 번째 인용]

김길동 등(2008)의 연구 결과...

Stevens 등(2010)은...

(3) 여섯 명 이상의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

- 처음 인용 때부터 첫 저자명만 쓰고 첫 저자명 다음에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 다만 6인 이상의 연구에 첫 번째 저자명이 동일한 다른 문헌이 인용되어 서로 다른 문헌임을 구분해야 할 경우 두 문헌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만큼까지 뒤에 따르는 저자명을 표기한 다음 “등” 혹은 “외”라고 표기한다.

예) 김길동, 홍길동 등(2008)의 주장처럼...

예) 최근의 연구(김길동, 홍길동 외, 2012)에서...

예) Kants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예) 최근의 연구(Kants et al., 2009)에 의하면...

3) 동명 저자에 의한 복수 연구물의 경우

- 동명 저자(들)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 저자명 뒤 표기된 출판연도로 별개 연구임을 구별한다.
-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저자의 성 앞에 머리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김길동(1998)과 홍길동 외(2000)의 연구에서...

예) 김길동 등(2000)과 홍길동 등(2002)의 연구에서...

예) C. S. Louis(2011)와 G. A. Center(2009)의 연구에서...

4)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완전한 기관명을 밝힌다.
- 기관이나 단체명을 축약어로 표기해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두 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로 표기해도 된다.

예) [본문에서 인용할 때]

최근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의하면...

외국의 연구(American Society for National Security, 2012)에 의하면...

예) [두번째 인용부터 축약어를 사용할 때]

형정원의(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 연구(IIIC, 2014)에 의하면...

5) 저자가 없거나 익명인 경우

- 연구자가 없는 연구를 인용할 경우 저자명 대신 연구를 지칭할 수 있는 두세 단어(보통은 제목의 시작부분)를 저자명으로 취급한다.

예) “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에서...

“*Private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예) ...라고 해석하였다(“한국 국가안보의 태동”(익명), 1980).

...라는 주장(“*National Security*”(anonymous), 1990)에서는...

- 판례나 법령과 같은 법률 자료도 저자가 없는 인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법령의 이름이나, 판례의 표기방식에 따라 표기하고 연도를 기록한다.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 제12224호, 2014.01.10)에서...

6) 개인 서신

- 편지나 메모, 전화, 전자우편이나 전자매체를 통한 대화가 인용의 출처일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적 서신은 재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전자매체(electronic media)로부터 얻은 정보와 같이 재생 가능한 정보의 출처는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12, 9, 13, 개인 서신)

(Taylor, 2007, 4, 22, personal communication)

2. 재인용, 번역서, 및 부분인용

1) 재인용

-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으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원전(저자명과 출판년도)과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 저자명이 본문에 제시될 경우 원전의 출판연도 뒤에 콜론을 한 후 재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예) 홍길동(2008: 김길동, 2005에서 재인용)은...

...을 제시하였다(Steven, 2008: 김길동, 2007: 174에서 재인용).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ouis, 1977: Kants, 1976에서 재인용).

2) 번역서

- 원전의 저자명을 적고 쉼표를 한 후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 인식개선방법에 대하여 Kalman(1988/2011)은...
...라고 하였다(Kalman, 1988/2011).

3) 문헌의 특정 부분을 직접 인용한 경우

- 다른 문헌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삽입할 때는 인용 출처의 쪽수 혹은 장(章)을 표시한다.
- 장(章)은 ‘장’(혹은 ‘chap.’)로 표기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 콜론(:) 표시를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학술지 권수는 축약어 Vol.로 표기하고 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원전 제목 속에 로마 숫자로 사용된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

예) (홍길동, 2012: 2장)

(김길동, 2009: 15)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 4: 44-52)

(Kai, 2012: chap. 4)

(Lion & Rush, 1996: 234)

3. 한 괄호 안에 두 편 이상의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의 표기 순서

1) 동일 저자의 연구

- 출판연도 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 이 때 저자명은 한번만 기입하고 출판연도만 기입하면 된다.
- 출판연도까지 동일한 경우 제목의 가나다라 순서로(영문의 경우 알파벳 순서) 출판연도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예) 선행 연구들(홍길동, 2005, 2011)에서...

선행 연구들(Paker & Rowl, 1998, 2001)에서...

최근 연구(홍길동, 2008a, 2008b)에서는...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저자명의 가나다라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쓰고 연구와 연구 사이에 세미콜론을 찍어 구분한다.
- 다른 연구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한 연구에서 주로 인용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맨 앞에 주된 문헌을 인용하고 “또한”
 ‘이란 용어로 부수적인 문헌을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다.

예) 여러 연구(홍길동, 2011; 김길동, 2012)에서는...

여러 연구자(Rawl, 2011; Steven, 2008; Troy, 2010)들은...

...라고 주장하였다(Hans, 2005; 또한 Harryson, 2008; John, 2010)

3) 국내와 동서양 문헌이 모두 포함된 경우

- 국내문헌, 동양문헌(국가명의 알파벳 순), 서양문헌의 저자순으로 나열한다.

Ⅲ. 참고문헌

1. 참고 문헌 제시 순서

- 참고문헌의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출판물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출판물을 제시한다.
- 외국 출판물은 동양 문헌(알파벳 순) 다음 서양 문헌 순서로 제시한다.

2. 참고 문헌 표기

- 참고문헌 목록에는 제일 먼저 저자명을 적고 한 칸 띄우고, 괄호 안에 출판연도를 쓴 후 마침표를 한다. 저서의 경우는 한 칸 띄운 다음 책이름(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을 적고 마침표를 하고서 출판 장소와 출판사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출판연도, 연구제목, 학술지명, 게재권(호), 쪽수를 적는다. 학술지명과 게재권(호)는 중고딕체(영문은 이탤릭체)로 적는다.
-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네 칸 들여쓰기를 한다.

예) 홍길동 (2014). 국가안보론. 서울: 진영사.

Paul, M. D., & Kal, C. A. (1999). *Introduction to National security*, New York

: West Publishing.

김길동 (2010). 안전관리사 역할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Michael, D. R., & Jinhong, Z. (1999).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united states air force security polic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9(3), 5-18.

1) 저자명

(1) 일반적인 표기 순서

- 국내문헌은 완전한 성명으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쓰지 않는다(외자 이름도 동일).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문헌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서양문헌은 연구자의 성을 적고 쉼표를 한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생략 표시의 마침표를 찍는다.
-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서대로 제시하고, 같은 자음일 경우, 모음 순서를 비교하고 모음도 같은 경우 받침의 자음 순(국어사전 항목 순)으로 제시한다. 글자가 먼저 끝나는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글자가 계속되는 것보다 앞에 둔다.
- 영어문헌의 경우 첫 저자 성의 알파벳 순서대로 제시하고 저자명에 포함된 글자 하나의 알파벳 순서를 비교하여 순서를 매긴다.

(2) 맨 앞에 제시되는 저자명이 같은 경우

- 동일한 저자명의 연구는 단독 연구이건 공동 연구이건 출판연도순으로 출판연도가 빠른 것을 앞에 배열한다.
- 맨 앞 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모두 참고 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자 성명이 짧기 때문에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된다.

(3) 출판 연도까지 동일한 저자의 연구

- 제목의 가나다(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단 A나 The와 같은 관사는 제외시키고 제목의 알파벳을 비교한다.
- 소문자 a, b, c 등을 표기하고 순서대로 제시한다.

예) 홍길동 (2009a), 국가안보...

홍길동 (2009b), 국민안전...

예) Steve, G. T. (1988a). Origins...

Steve, G. T. (1988b). Risk...

(4) 단체나 기관명의 연구

- 연구 단체나 기관명의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되 기관이나 단체의 완전한 이름을 쓴다.

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4, 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

60년사. 서울: 백산출판사.

(5) 익명의 연구나 저자가 없는 경우

-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 제목의 두세 단어를 저자명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익명(영문 Anonymous)이라고 표기한 후 쉼표를 찍고 출판연도를 적는다.

- 저자가 없는 경우도 연구의 제목을 저자명으로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예) 국가안보의 태동은 (익명, 1955). 안보의 태동. 서울: 백산출판사.

예) National Security (Anonymous, 1955),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

2) 출판연도

- 저자명 바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쳐서 써넣고 괄호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1) 미출판 된 연구가 인쇄 중일 경우는 괄호 안에 “인쇄중”이라고 표기하고 해당 저자의 맨 마지막 연구로 취급한다.

(2) 현재 심사 중이어서 출판이 확실치 않는 경우 괄호 안에 “심사중”이라고 표기하고 심사 중인 정기 간행물명을 밝힌다.

예) 김길동 (심사중). 국민안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3) 발표 자료 등으로 만들어졌으나 출판되지 않는 경우 괄호 안에 “미간행”이라고 표기하고,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라면 학술발표 년,

월, 일을 기입하고 쉼표를 한 후 미간행임을 표기한다.

예) 김길동 (2010, 5, 3, 미간행). 국가안보·국민안전 서비스의 발전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프레스센터.

3) 원전의 서지 사항

- 동양과 국내의 학술지명이나 저서명은 중고딕체로, 서양 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영문 제목이나 부제는 시작 단어의 첫 알파벳만을 대문자로 쓴다.
- 참고자료가 책과 같은 통상적인 출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제목 옆에 대괄호([])를 하고 써 준다.

예) [CD-ROM], [On-Line} 등

(1) 정기 간행물

① 정기 간행물

- 정기 간행물은 간행물의 완전한 이름과 권수를 중고딕체로 쓰고 본문 인용 때의 표기 방식과 달리, 권수 앞에 “Vol.”이란 글씨를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권수를 적는다. 그리고 권수 번호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호수를 적고 이어서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다.

② 대학의 논문집

- 대학의 논문집의 경우 기관지명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행기관을 명시한다.

예) 김길동 (2013). 안전서비스의 효율적 목표달성에 관한 연구. 안전연구, 5(1), 56-87. 안전대학교 일반대학논문집.

③ 신문 기사의 인용

- 사설이나 일반 기사가 쓴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취급하고, 발행일자 연, 월, 일을 괄호로 묶어 쓰고, 기사의 제목과 게재면을 표시한다.

예) 안전일보 (2009, 3, 1). 안전 관리자의 책임. 5면.

- 독자 혹은 특정인의 기고라면, 이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로 취급하여, 일반학술지에 실린 문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익명의 기

고일 경우는 기사의 제목 두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명을 대신한다.

예) 홍길동 (2009, 3, 1). 민간경비원의 책임. 경비일보, 5면.

④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예) 김길동 (2014, 겨울). 범죄의 수사구성, 수사연구, 55-98.

(2) 저서를 포함한 비정기 간행물

① 책, 보고서, 학위논문, 안내서(brochures), 요강(要綱), 시청각 매체 등을 포함해서 정기 간행물이 아닌 자료

예) 이길동 (2010).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② 논문 하나가 단행본으로 묶여진 긴 논문(monographs)의 경우

예)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논문집명, 권(호), 전 권이 아닌 경우 쪽수(연속 간행물인 경우는 일련번호).

③ 학위 논문

예) 김길동 (2014). 경호경비 산업의 발전 방안.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④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예) 김길동 (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⑤ 미간행 발표 자료

예) 홍길동 (201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결산 보고.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차 총회, 12월 22일. 경기대학교 대강당.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의 인용

-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적고 마침표를 찍고 장의 제목을 적는다. 그리고 전체 책을 엮은 편집자의 성명을 적고 한 칸 띄고 편집일 경우 ‘편’ 저서일 경우 ‘저’(영어는 편집자명 앞에 “In”을 넣어 시작하고 괄호 안에 ED./편집자가 복수일 경우 Eds.)라고 표시한 후 저서명(중고딕체)을 적고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적어 넣는다.

예) 한상희 (2006).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최응렬 (편). 경찰개혁론 (pp. 5-15). 서울: 법문사.

⑥ 역서와 편역서의 경우

예)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년도). 번역서명(중고딕체, 영문은 이탤릭체) (역자명 역/편역). 출판지: 출판사. (원전의 출판년도).

예) Durkheim, E. (2008).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황보종우 역). 파주: 청아출판사. (원전은 1897에 출판).

⑦ 초록 문헌의 경우

예) 김길동(2014). 국가안보 인식의 개선 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하계심포지움 “국가안보의 의미”.

⑧ 재인용한 자료들의 제시

- 본문에서와 달리 참고 문헌 목록에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한다.

⑨ 논문, 책,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등의 논평 문헌 표기

예) 논평자 성명 (출판연도). 제목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원자료의 형태와 제목]. 자료가 실린 서명, 권(호), 페이지.

※ 논평 문헌이 아니라 매체를 직접 인용한 경우

예) 감독 및 제작자의 이름 (역할) (년도). 제목. [원자료 형태] 방영지 역(비디오 경우 출시회사 주소지): 방송사명(비디오 경우 제작사명).

예) 김철민, 조현탁 (감독) (2010). 대물. [TV 연속극] 서울: SBS TV.

(4) 전자 매체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인용한 내용의 출처가 마이크로 필름이나 시디롬, 온라인 등의 매체일 경우 그 출처 형태와 출처 정보를 표시한다.

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main/main.html>, 2014년 12월 22일 검색)

(5) 출판 장소와 출판사

- 저서의 경우 출판 사항에 출판 도시명과 출판사명을 적는다.

- 출판지가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거나 다른 곳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도시명 다음에 쉼표를 하고 국가명(미국은 주(州)명을 공식화된 약자로)을 적는다.

- 출판사명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간단하게 적고 associations, corporations, university press 등은 적되 Publishers, Co., Inc., 등의 불필요한 용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뺀다. 그러나 Books와 Press와 같은 고유 명사는 그대로 쓴다.
- 원전의 출판 도시가 하나 이상일 경우 맨 앞에 나와 있는 출판지나 출판사의 본사가 있는 출판 도시를 적는다.

IV. 서 평

1.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고 후자는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한다.
4. 서평은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가격, ISBN을 포함한다.

V. 기 타

1. 외래용어 및 외국어
 -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

기한다.

- 외국 인명과 논문 제목은 원어명은 그대로 표기한다.

2.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예, 표 1, 그림 1), 표 제목(고딕체, 10pt)은 표 위쪽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그림 제목(고딕체, 10pt)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에 위치시킨다.
- 표의 설명주는 “주 : 1), 2), 3)”으로 시작하고(※주: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 과 같이 표기한다.
- 표 작성에서 줄긋기는 가로줄만을 사용하며 세로 테두리선을 쓰지 않는다. 가장 바깥 가로 선은 굵은 선을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을 사용한다.
-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 원고 작성의 편의상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3.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4.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논문집필요령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 및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집필요령에 없는 내용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서(APA)에 따른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조의 2호에 규정된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편집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②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 ① 편집위원은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 이상의 자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한다. 단 상임이사회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은 국내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문집,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학회의 연구지 등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

상)에 1년을 기준으로 3편 이상의 게재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기타 이사회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업 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6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안보, 안전, 치안, 범죄, 경호, 경비, 소방, 보안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3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의견서 등을 우송한다.

제8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 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평가서에 실증논문과 개관논문 또는 이론논문을 구분하여, 7개 심사기준별로 7점 척도에서 평가하며, 총점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 ‘추가적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각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여, 필요시 논문 수정 제의 요구서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 ② 2차 심사는 ‘부분 수정 후 게재’ 또는 ‘대폭 수정 및 재심사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⑤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

게 통보한다.

제9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10조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 20쪽까지는 쪽수에 관계없이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편당 20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편당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21쪽부터 한 쪽당 1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 ① 학술지 내에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각 권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②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③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요약,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 ④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 ⑤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⑥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13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작성 세칙 또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운 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

제17조 【내규개정】

내규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8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당시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4. 12. 22 제정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의 학술지인 본 학회지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기고자들에게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1장 연구윤리, 2장 연구진실성심사로 나뉜다.

제1장 연구윤리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 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를 참여자의 서명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가 영아, 유아, 또는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개입(intervention)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게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면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③ 위 1.항의 경우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연구 불참여의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연구를 시작한다.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해당 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에서 속이기】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

고 속이지 않는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는 기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③ 사후설명 정보의 제공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 ②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 ③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 ④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 ① 주요부정행위 :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자료(data)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료(data)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주요부정행위이다.
 -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간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중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 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부적절행위 :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 조사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 주요부정행위 교사·강요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출판 업적】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용어정의

-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는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 ③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학술적·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 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으로 한 여려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⑥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15조 【자료보관 및 재검증을 위한 공유】

① (보관)

- 수집된 원자료를 매체(디스켓, CD, USB 등)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 책임은 주저자에게 있다.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기록자료라고 한다.
- 기록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결론도출에 근거가 된 자료를 근거자료라고 한다. 근거자료의 보관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기 위하여, 출판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않는 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연구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가 어려운 경우
- 소유한 근거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는 경우
- 재검증의 필요가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

③ 전항에 의해 근거자료를 제공받은 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근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근거자료를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연구부적절행위로 간주되고 연구진실성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훈령 236호 (2007. 2.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3. 8 제정, 2004. 8 수정)의 3장 “연구관련 윤리”.

APA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2 제정)의 8장 “연구 및 출판”.

- 프린스턴대학교 학부생을 위한 출판규정 (2006-2007).
-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2008. 7. 30).
- 과기총뉴스레터 (2008. 8.5). “올바른 논문저자 표기와 연구윤리”.
- 연구윤리정보센터 “좋은연구” 웹사이트 (<http://좋은연구.kr>, 또는 <http://www.grp.or.kr>). (2008. 8.15)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6. 6.16. 규칙 제1563호)
-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07. 1. 2 제정).
-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7. 3. 19 제정).

제2장 연구 진실성 심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④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기고하는 모든 저자들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절차】

- ① 제보 또는 혐의가 접수 된지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 및 해당기관에 알린다.
-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 【예비조사위원회】

- ①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혐의도 접수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제1부 13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1조 【본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조사위원회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윤리위원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에 조사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판정 또는 조치 필요사항
-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7조 【판정 및 조치】

- ① 본조사결과의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 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판정사항은 제보자,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장, 기고자, 기고자의 소속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20조 【시행세칙】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표절 규정

2014. 12. 22. 제정

제1조 【정 의】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유 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 【심사주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제 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5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논문투고 일정

| 순서 | 전반기 | 후반기 |
|--------------------|--------------------|----------------------|
| 원고접수마감일 / 발행예정일 | 4월 30일 / 6월 30일 | 10월 31일 / 12월 31일 |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1)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안내

- 위에 명기된 접수 마감일은 매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다음호로 연기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된 논문은 학회에 소속되며, 연구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작성규정 : 학회지 편집양식 A4 용지 20매 기준 (별쇄본 및 심사료 포
함)
- 논문투고시 단독저자-1편, 공동저자-1편으로 총 2편으로 편수제한
- 투고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자명을 표기할 때 저자가
다수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
동저자의 순으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투고 방법안내

온라인 논문투고 : knspsa2014@gmail.com 또는 홈페이지(<http://www.knssa.com>)

3. 온라인 논문투고 후 문의

담당자 : 이대권 (010-9263-2702/knspsa2014@gmail.com)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강 옥
(경찰대)

| | | | | |
|------|--------------|--------------|-----------------|---------------|
| 편집위원 | 권혁빈 (용인대) | 김도우 (경남대) |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 김태훈 (성신여대) |
| | 윤민우 (가천대) | 이창배 (울산대) | 장항배 (중앙대) | 최 관 (한세대)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7호

| | |
|-------|---|
| 인쇄일 | 2018년 12월 28일 |
|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
| 발행인 | 박준석 |
| 편집인 | 강 옥 |
| 발행처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449-7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교134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 박준석교수 연구실 전화 (031) 8020-2633 FAX (031) 8020-2882 E-mail knspsa2014@gmail.com / koreasoulist@gmail.com Homepage http://www.knssa.com |
| 인쇄처 | 백산출판사 |
| 전 화 | (02) 914-1621(代) |
| F A X | (031) 955-9911 edit@ibaeksan.kr www.ibaeksan.kr |

비매품

